

한-인니 경제협력 효과성 제고

2017년 7월

기획재정부

이 속 경

<차 례>

국외훈련개요	1
훈련기관개요	2
1. 서론	5
2. 인도네시아 경제 및 경제정책	7
가. 인도네시아 일반현황	7
나. 인도네시아의 경제 현황	18
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정책	20
3.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간 교류 현황	38
가. 양국 정부간 경제협력 현황	38
나. 양국간 무역 현황	41
다. 양국간 상대국에 대한 인식	44
4.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개발협력 정책	52
가.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	55
나. 국제개발에서 민관협력	71
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개발협력 정책	76
5. 정책 제언	85
가. 유상협력분야의 민관협력사업 발굴	85
나. 대인도네시아 ODA 규모 확대	89
다. 이슬람문화에 대한 이해 및 활용	91
참고문헌	95

국외훈련개요

1. 훈련국 : 인도네시아
2. 훈련기관명 : 가자마다대학교
(Universitas Gadjah Mada)
3. 훈련분야 : 경제협력
4. 훈련기관 : 2015.2.2 - 2017.8.1

훈련기관개요

I. 기관개요

- 훈련기관명 : Universitas Gadjah Mada
- 인터넷 웹주소 : <http://www.ugm.ac.id> (학교) /
<http://mkp.fisipol.ugm.ac.id> (학과)
- 연락처
 - 대학주소 : Jalan Socio Yustisia No. 2, Bulaksumur,
Yogyakarta 55281, Indonesia
 - 학과 사무실 : 62 274 563362 ext. 209 (전화),
62 274 563362 ext. 222 (FAX)

II. 기관소개

○ 연 혁

- 본 대학은 1949년 설립된 인도네시아 최대규모의 학교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인도네시아 대학교, 반둥 공과대학교 등과 함께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지난 '15년 1월 발표된 대학순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 1위, 동남아시아 내 9위를 차지할 만큼 인도네시아의 명문대학교로,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유명인사를 배출하였으며, 특히, 인도네시아 현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졸업한 학교이기도 함

○ 소속대학에 대한 개략적 설명

- 인도네시아의 교육도시인 족자카르타에 위치한 국립대학교로, 18개의 학부와 74개의 학과, 86개의 대학원 학과가 있고, 전체 학생수는 35,000 여명임

○ 소속학과 소개

- 입학조건 및 준비서류 : 외국인의 입학은 학교에서 스폰서하는 비자 때문에 보통 학기시작 5개월전에 마감하므로 준비는 가급적 일찍 시작하는게 좋음. 관용비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훨씬 여유가 있을 것임. 특히, 인니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대학원 입학을 위하여 토플성적을 요구하므로 희망하는 대학에 토플성적이 필수조건인지 미리 확인하여 토플시험도 미리 준비해야 함.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인 사진, 여권, 대학졸업증, 성적증명서, 건강증명서와 교수추천서 정도만 제출하면 됨.

- 학사일정 : 2015. 9 ~ 2016. 1 (1학기), 2016. 2 ~ 2016.6 (2학기)
2016. 9 ~ 2017. 1 (3학기), 2017. 2 ~ 2017.7 (4학기)

- 소요학자금 : 외국인은 1~3학기까지 총 3학기 학자금인 6,500불을 입학전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4학기는 추가로 1,300불을 납부하여 총 7,800불이 소요됨

- 학교주변환경 : 인도네시아 최대 대학으로 알려져 있으며, 족자카르타에서 가장 긴 도로인 Jalan Kaliurang이 캠퍼스를 관통할만큼 규모가 크고, 캠퍼스 주변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식당들이 밀집해 있음.

Ⅲ. 입교교섭 자료

○ 학교선정 및 지원(입학수속) : UGM은 인니에서 손꼽히는 명문대로 기존 어학연수를 이곳의 어학당에서 했기 때문에 학위과정도 동일한 대학교를 선택하였음. 입학수속은 인터넷으로만 접수함 (<http://um.ugm.ac.id> 에서 접수란의 Foreign을 클릭하여 접수)

○ 지원시 필요한 어학성적 : 토플 450점 이상 성적표와 인도네시아어 수료증이 필요한데, UGM내 어학연수기관인 INCULS 고급과정 수료증도 인정됨. 토플시험은 한국에서 보는 IBT (Internet-based Test) 또는 인터넷 환경이 안 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PBT(Paper-based Test) 외에 또 다른 형태인 ITP(Institutional Testing Program)를 UGM 내 언어훈련센터인 PPB(Pusat Pelatihan Bahasa)에서 신청하면 시험을 볼 수 있는데 매달 말에 한 번씩 시험이 있음.

○ VISA관련 : 본인은 학교에서 스폰서하는 학생비자를 선택하였는데, 비자발급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번거로우므로, 관용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함

○ 학비관련 : 본직이 선택한 공공정책관리학과의 경우 1학기부터 3학기까지의 학비인 6,500불을 한꺼번에 내고, 마지막 4학기는 1,300불로 총 학비는 7,800불임

1. 서론

경제협력은 보통 투자 및 자본협력 등을 일컫지만 광의로는 무역을 포함한 모든 경제교류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며, 때로는 대개도국 경제협력의 줄임말로 이해되기도 한다. 경제협력은 정부차원의 개발원조, 상업차관, 수출신용, 민간부문에 의한 직·간접투자, 해외건설, 무역, 해외이주 및 해외취업 등을 포함하며, 국가 상호간에 이전되는 재원을 포함한다. 따라서 선진국 간, 개도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경제 분야의 제반 협력관계를 경제협력이라 할 수 있다(KOICA 홈페이지1).

이러한 경제협력의 개념 중에서 정부차원의 개발원조는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경우 인도네시아를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양자와 다자협력, 무상과 유상협력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제언을 찾아 보고자 한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한 G20 국가이기도 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²⁾ 최대 경제국으로 2억 5천만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끌여가는 내수시장이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는 경제이다. 팜오일, 구리, 원유, 석탄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며 커피, 산림 등 농림업도 발달되어 있다. 자연히 대부분의 수출 상품은 천연자원 아니면 농산물이다. 이와 같이 거대한 내수시장과 천연자원의 기반 위에 정치적 안정이 결합되어 인도네시아는 최근 연평균 5%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보였다”(한국행정연구원, 2013).

1) <http://www.koica.go.kr/devaid/devaid/define/index.html>

2) ASEAN(아세안,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가입국은 총 10개국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이고, 파푸아뉴기니와 동티모르는 준회원국(옵저버 가입국)이다.

이렇게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도 여러가지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경제발전 및 중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한국 양국간의 경제협력 역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한국과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본 후, 인도네시아의 경제 현황 및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알아보고, 두 국가간 경제협력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인도네시아 경제 및 경제정책

인도네시아는 한국 내에선 발리 외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반면, 인도네시아 내에서 한국의 인지도는 매우 높다. 이러한 두 국가간 경제협력을 논하기에 앞서 인도네시아라는 국가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문화적 특징과 함께 한국과의 공통점 등을 살펴보고, 경제 현황과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살펴보자.

가. 인도네시아 일반현황

“인도네시아는 그 지리적인 광범위성과 함께 그에 따르는 다양성으로 정의할 수 있는 국가이다. 지리적으로는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한 도서국가로서 약 17,508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인간이 거주하는 섬은 6,000개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의 국토는 크게 수마트라(Sumatera), 자바(Jawa), 칼리만탄(Kalimantan), 술라웨시(Sulawesi), 파푸아(Papua) 등 5개의 큰 섬과 누사 똥가라(Nusa Tenggara)제도와 말루쿠(Maluku) 제도로 불리는 2개의 군도, 그리고 60개의 소군도 등으로 나뉜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어 지질 구조상 매우 불안정한데, 수마트라에서 반다 해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400여개에 이르는 화산들이 그 증거이며, 이 중 약 150개가 활화산이다. 인도네시아 국토의 전체 면적은 약 190만m²로 세계에서 15번째에 해당한다”(한국행정연구원, 2013).



< 그림 2-1 > 인도네시아 지도

“총 인구는 약 2억 4천명(2010년 기준 237,641,326명, Sensus Indonesia 2010)으로 세계 4위 규모이며 약 300여 종족이 전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다민족 국가이다. 두 대양 사이에 위치한 까닭에 과거부터 인도, 아랍, 중국, 유럽의 영향을 수세기 동안 받으면서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으로부터 이어받은 문화적 다양성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근대에는 독립 이전까지 포르투갈의 짧은 식민지배 이후, 네덜란드로부터 1602년부터 1942년까지 300년 넘는 통치를 받았으며, 2차 세계대전 중 1942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도 경험했다. 인도네시아는 국제관계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1950년대에는 인도, 유고슬라비아, 이집트와 함께 비동맹운동(NAM)을 이끌며 제3세계 국가들과의 관계를 주도하였다. ASEAN의 설립을 이끌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정치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1990년대 말 수하르토(Soeharto) 정권 붕괴 이후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G20 국가에 포함되는 등 국가의 위상이 향상되고 있다”(한국 행정연구원, 2013).

다음으로는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특징으로 가장 눈에 띄는 종족, 언어, 종교 등에 따른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다양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갈등문제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통합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정치적인 면에서 한국과의 공통점도 찾아보고자 한다.

1) 인도네시아의 다양성

인도네시아의 종족은 300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도네시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Sensus)³⁾에 따르면, 자바(Jawa)족과 순다(Sunda)족이 각각 40.2%(95.2 백만명)와 15.5%(36.7 백만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바타크(Batak)족 3.58%, 마두라(Madura)족 3.03%, 브타위(Betawi)족 2.88%, 미낭카바우(Minangkabau)족 2.73%, 부기스(Bugis)족 2.69%, 말레이(Melayu)족 2.27%, 아랍(Arab) 2.1% 등을 차지한다(Sensus Indonesia, 2010).

“한편,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인 화교는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한 소수민족이다. 종적으로 봤을 때 이들은 토착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부와 사회로부터 공개적인 차별을 받아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들은 1965년과 1998년에 일어난 폭동을 비롯하여 여러 폭력의 희생자가 되어 왔다. 또한 화교들은 수하르토 정권이 몰락하고 민주화가 되기 전까지 한자로 기록된 것을 소지할 수도 없었고, 한약을 먹을수도 없었으며, 중국문화를 보여주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되었고, 신분증에는 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었다. 비록 현재는 대부분의 규제 조치들이 강제되지 않고 있으며, 남아 있는 것도 폐지될 예정이나 여전히 화교들에 대한 사회적 법적 차별은 상존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김재원, 2007).

3) 인도네시아 인구주택총조사인 Indonesia Sensus는 현재까지 2010년도 조사결과가 최신버전이며,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Badan Pusat Statistik)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공통어인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 외에도, 지역별, 종족별로 다른 지역어(Bahasa Lokal)를 사용하는데, 약 726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자바섬의 중부와 동부에 주로 거주하는 자바족이 사용하는 자바어로 대략 84.3백만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자바섬 서부에 주로 거주하는 순다족이 사용하는 순다어는 34백만명 정도가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⁴⁾.

인도네시아에서 종교는 일상생활을 지배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무교는 인정하지 않으며, 이슬람교, 불교, 카톨릭, 개신교, 힌두교, 유교 이렇게 총 6개의 종교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는 KTP(주민카드, Kartu Tinggal Penduduk)상에도 종교가 기재되고, 정부의 행정부처 중에는 종교부(Kementerian Agama)도 설치되어 종교문제를 관할한다. 이러한 종교부의 주요한 업무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메카를 방문하는 일인 Haji(하지)나 결혼을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법적으로 종교가 서로 다른 남녀간 결혼이 금지되며, 무슬림들에게 하지는 종교적으로 의무사이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한 해에 방문가능한 인원을 국가별로 할당해주는 쿼터제를 운영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전세계에서 이슬람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서 할당량보다 신청자가 더 많아서 신청을 하고도 몇 년을 대기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하지 대상자 관리 및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의 할당량 협상 또한 종교부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Sensus)에 따른 전체 인도네시아 인구 중 종교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인도네시아 총 인구는 237,641,326명인데, 이 가운데 이슬람신자 87.18%(207,176,162명), 개신교신자 6.96%(16,528,513명), 카톨릭신자 2.91%(6,907,873명), 힌두교신자

4) https://www.ethnologue.com/show_country.asp?name=ID

1.69%(4,012,116명), 불교신자 0.72%(1,703,254명) 그리고 유교가 0.05%(117,091명)을 차지한다(Sensus Indonesia, 2010).

특이한 것은 중국의 공자로부터 시작된 유교를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종교로 인식하지 않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공식종교로서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앞에서 설명한 중국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치로 실행된 것이다. 종교를 갖지 않은 일부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5개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했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유교를 법적으로도 공식종교로 인정해 준 것이다. 이와 같이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한 해동안 공휴일 거의 대부분은 6개의 공식적인 종교와 관련된 기념일이고, 그 중에서도 이슬람 관련 종교기념일이 다른 종교에 비교하여 월등하게 많다.

이와 같이 총인구중 무슬림 인구가 87%나 차지함에 따라 소수 종교에 대한 차별과 종교로 인한 갈등문제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례로 개신교도이며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자카르타 현직 주지사 아후이 2016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운동에서 발생한 종교모독 발언으로 인해 2017년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투옥된 사건이다.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종족과 종교로 인한 갈등 이외에도 지역간 개발 격차도 매우 커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지도를 보면, 자바, 수마트라, 술라웨시, 칼리만탄, 파푸아 등 5개의 큰 섬과 그 외 크고 작은 많은 작은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전체 면적이 크면서도 섬이 많은 국가이다 보니 도시와 낙후된 지역(농촌, 어촌, 산촌 등)과의 격차가 매우 크다. 실제로 자카르타를 가보면 세계의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뻥뻥한 고층빌딩, 교통혼잡, 공기오염 등의 문제점을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카르타 시내의 교통혼잡은 전세계적으로도 악명높다. 반면에, 현대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전통문화를 따르는 종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도농간 개발 격차 외에

도, 각 섬과 섬 사이의 개발 격차문제가 심각하다. 쉽게 말하면, 수도인 자카르타가 위치한 자바섬을 중심으로 각종 개발과 도시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의 2010년 인구총조사(Sensus Indonesia) 통계자료에 따라 실제 각 섬별 인구분포를 보면, 자바섬이 면적은 인도네시아 전체 면적의 6.8%임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57.5% 가량을 차지할 만큼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Sensus Indonesia, 2010).

(단위 : %)

	자바	수마트라	술라웨시	칼리만탄	말루쿠	파푸아
면적비율	6.8	25.2	9.9	28.5	4.1	21.8
인구비율	57.5	21.3	7.3	5.8	1.1	1.5

< 표 2-1 > 인도네시아 섬별 인구 분포 비율

이러한 자바섬 위주의 인구집중과 개발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자바 이외의 다른 섬에 부족한 인력의 관리를 위하여 자바섬 주민을 다른 섬으로 이동시킨 후 정착을 돕는 Transmigration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네덜란드 식민지배를 받던 19세기 초 수마트라의 농장 경영인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작되었고, 1945년 독립 이후에도 이어졌는데, 1979년과 1984년까지 총 250만명 가량, 54만여 가족을 자바섬에서 다른 섬으로 이주시켰다. 이 정책의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도 했는데, 1981년 람퐁주 전체 인구 중(3백만명) 60%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주한 주민들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수하르트 대통령이 1998년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인 2000년 8월 예산 부족을 사유로 규모가 감소되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현재도 노동인력부에서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2) 인도네시아의 통합을 위한 노력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각종 다양한 종족·언어·종교를 가진 국민이 공존하며 갈등도 있기 때문에, 이질성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가장 사용비율이 높았던 자바어(총 인구 중 40% 정도가 사용)가 아닌 말레이어 계통의 인도네시아어를 1928년 10월 28일 청년선언을 통하여 공식어로 정식으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청년선언은 인도네시아의 네덜란드 식민지 치하에서의 독립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국민들에게 독립국가로서의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세운다는 이상을 불어넣어 준 것으로 평가되는데, “하나의 조국 인도네시아, 하나의 민족 인도네시아, 그리고 하나의 언어 인도네시아어” ("Tanah air Indonesia", "Bangsa Indonesia", dan "Bahasa Indonesia")라는 이념을 공표하였다⁵⁾. 이러한 인도네시아 사회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의 통합된 인도네시아를 추구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도 당연히 이어지는데,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이념인 판차실라(Pancasila)이다.

판차실라는 산스크리트어로 다섯이라는 뜻의 판차(Panca)와 원칙 혹은 원리를 뜻하는 실라(Sila)로 구성된 단어로, 다음과 같은 인도네시아 건국의 5원칙을 의미하는 이데올로기이다.

- i) 전지전능한 위대한 유일신에 대한 신앙
(Ketuhanan Yang Maha Esa)
- ii) 정의롭고 문화적인 인간성
(Kemanusiaan yang adil dan beradab)
- iii) 인도네시아의 통일
(Persatuan Indonesia)

5) https://id.wikipedia.org/wiki/Sumpah_Pemuda

- iv) 합의와 대의제도를 통하여 지혜롭게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Kerakyatan yang dipimpin oleh hikmat kebijaksanaan dalam permusyawaratan/perwakilan)
- v)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한 사회 정의
(Keadilan sosial bagi seluruh rakyat Indonesia)

이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부터 가장 유명한 민족지도자이자 독립운동가이었던, 독립 이후에는 인도네시아의 초대대통령이 되었던 수카르노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바로 직전인 1945년 6월 1일 한 연설에서 주창한 것으로, 1945년 공포된 인도네시아 헌법에서부터 현재의 헌법에까지 끊임없이 명시될 만큼 인도네시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국이념이다⁶⁾.

“이러한 판차실라의 정신은 인도네시아 민족주의와 종교적 다원주의 등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민족주의는 다양한 종족을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자바족과 같은 다수 종족으로의 동화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종교의 경우에도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정당들은 인도네시아를 신정국가 또는 정교일치 국가로 만드는 것을 공식적으로 포기했으며, 이슬람교가 국교가 아닌 여러 종교의 하나로서 존중받는 것에 공식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민감한 문제이다. 이슬람이 인도네시아의 모든 주에서 절대 다수가 아니라는 점, 특히 기독교와 가톨릭 인구를 합친 인구가 이슬람 인구보다 많은 일부 지역, 예를 들어, 말루쿠(Maluku), 누사 땡가라 티모르(Nusa Tenggara Timur), 파푸아(Papua), 술라웨시 우따라(Sulawesi Utara) 같은 지역에서 종교간 충돌이 여전히 빈번하다”(김재원, 2007).

6) <https://id.wikipedia.org/wiki/Pancasila>

3) 한국과의 비교

이렇게 인도네시아는 방대한 국토 면적, 인구수로 세계 4위를 기록하는 인구대국, 다민족·다언어 국가 그리고 무슬림이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한 눈에 보기에 한국과는 많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빨리빨리’라는 단어로 표현될만큼 한국인은 급한 성격인데 반해, ‘고무줄 시간을 뜻하는 잠까렛(Jam Karet, 인도네시아인들의 약속 시간에 늦는 습관을 표현하는 단어로, Jam은 시간 Karet은 고무를 말함)으로 표현되는 인도네시아인은 여유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현지직원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업무강도가 센 한국기업에서 느긋한 성격의 인도네시아인들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나 많이 다르게 보이는 두 국가,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그 역사적 배경, 그 중에서도 정치적 부분에서는 몇 가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첫째, 오랜 식민지배를 겪었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는 300년여간의 네덜란드 식민지배와 연이은 3년여간의 일본 식민지배를 겪은 이후,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1945년 8월 17일 독립선언을 한다. 다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네덜란드 식민지배 치하에서부터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민족지도자이자 훗날 초대대통령이 되는 수카르노(Soekarno)는 일본이 독립을 보장하였다는 이유로 일본과는 우호적인 입장에서 독립운동을 하였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의 독립기념일은 우리나라의 광복절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독립기념일인 8월 17일 국기 게양 외에도, 여러가지 행사가 전국에서 열린다. 정부 주최의 기념식 외에도 공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리는 독립기념일 기념식에 참석해야 한다. 또한, 각 마을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여러 종류의 게임(Lomba, 롬바)이 주를 이루는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본 행사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주민 대부분이 참여한다.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 국기의 상징색인 빨간색과 흰색을 상·하의로 입고 인사로 Merdeka(독립을 의미함)을 외치는 등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독립을 기념한다.

둘째, 두 국가는 모두 독립 이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을 살펴보면 몇 가지 비슷한 점이 눈에 띈다. 우선, 독립운동가가 초대대통령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가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대통령이 되었고, 인도네시아도 독립운동가였던 수카르노가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두 초대대통령의 역사적 평가는 서로 다르지만 임기를 제 때 마치지 못하고 자리에서 하야한 점도 동일하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은 4·16 부정선거로 하야 후 하와이로 망명하고,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Soekarno) 대통령은 두 번째 대통령인 수하르토(Soeharto)에 의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과는 다르게 수카르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의 공항이름이 수카르노-하타일 정도로 인도네시아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있다.

두 국가는 독립운동가 출신의 초대 대통령 이후 군부정권이 오랫동안 통치를 하게 된다. 인도네시아의 제2대 대통령인 수하르토(Soeharto)는 군인출신으로 약 30여년간(1967년 ~ 1997년) 장기집권을 한 점은 제 3공화국부터 6공화국(1963년 ~ 1992년)까지 군부출신의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이 집권을 했다는 부분 역시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의 유사한 점이다.

이 외에도, 두 나라는 공통적으로 부녀대통령을 배출했다. 한국의 박정희-박근혜 대통령처럼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대통령의 장녀인 메가와티(Megawatti) 대통령도 대통령을 역임하였다(2001년~2004년).

셋째, 두 국가는 모두 1997년 발발한 외환위기를 겪었고, 이러한 외환위기는 결론적으로는 양국의 정치환경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 점도 일치한다. 한국은 1997년에 외환위기 와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어 역사상 첫 정권교체를 달성하였고, 인도네시아는 1997년 발발한 외환위기로 30여년간 장기집권하고 있던 수하르토에 대한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반정부시위로 인해 결국에는 1998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다. 그 후 후임인 하비비(Habibie) 정권시기인 1999년 40년만의 첫번째 총선을 치렀고,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번에 걸쳐 이뤄진 헌법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대통령 간선제를 폐지, 정·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였고 2004년 역사상 첫 직선대통령을 선출하였다.

나. 인도네시아의 경제 현황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최대 경제국으로 거대한 내수시장과 천연자원의 기반 위에 정치적 안정이 결합되어 인도네시아는 최근 연평균 5%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2008년의 금융위기, 최근 EU의 재정 위기 등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도네시아 경제는 2012년 상반기 중에는 6%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보이기도 하여 G20 국가 중 중국(7.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대규모 내수시장과 이를 겨냥한 해외 투자의 증가에 힘입어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한국행정연구원, 2013).

2015년에는 주요 수출품인 석유, 석탄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및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환율 변동 확대에 따른 투자심리 약화 등으로 2015년 경제성장률은 2009년 이후 최저치인 4.8%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에는 경기부양 및 인프라 개발에 따른 정부지출 확대, 민간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는 5%대로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7).

2017년 4월 IMF(국제통화기금)는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Power Parity)를 기준으로 하는 GDP를 보면 인도네시아가 세계 10대 국가에 들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IMF는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인도,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여러 국가들을 제치고 아시아의 경제 성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연도	2013	2014	2015	2016
GDP 성장률 (%)	5.6	5.0	4.7	5.1
1인당 GDP (달러)	3,667	3,524	3,416	3,384
GDP (억 달러)	9,125	8,886	8,726	8,758

< 표 2-2 > 인도네시아 GDP 현황 : 출처 - 인도네시아 통계청

순위	1	2	3	4	5	6	7	8	9	10
국가명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독일	러시아	브라질	인니	영국	프랑스
PPP GDP (억 달러)	212,917	185,691	86,623	52,377	39,802	37,996	31,413	30,032	27,855	27,336
1인당 PPP GDP(달러)	15,398	57,436	6,615	41,274	48,110	26,489	15,241	11,720	42,480	42,313

< 표 2-3 > 2016년도 PPP 기준 GDP 순위 Top 10, 출처 : IMF

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정책

인도네시아는 서로 관계있는 3개의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RPJPN(국가장기개발계획, Rencana Pembangunan Jangka Panjang Nasional), RPJMN(국가중기개발계획, Rencana Pembangunan Jangka Menengah Nasional), MP3EI(경제개발촉진마스터플랜, Masterplan Percepatan dan Perluasan Pembangunan Ekonomi Indonesia)이 그것이다.

RPJPN(국가장기개발계획)은 20년간(2005년 ~ 2025년)의 개발계획이고,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4단계의 국가중기개발계획으로 다시 나누어 수립된다. 5년간의 개발계획인 국가중기개발계획은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교체되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도 RPJPN(국가장기개발계획) 범위 이내라면 경제개발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중기개발계획은 해마다 APBN(정부예산)과 함께 발표되는 1년간 정부가 실행할 실질적인 사업계획인 RKP(국가실행계획)를 통하여 구체화된다.

다음은 이 3가지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Indonesia Investment⁷⁾).

7) Indonesia Investment,

<https://www.indonesia-investments.com/id/proyek/rencana-pembangunan-pemerintah/item305?#>

1) 국가장기개발계획(RPJPN 2005~2025)

국가장기개발계획은 아래와 같은 총 5개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 i) 선진적이고, 질서있고 평화로우며 사회적 정의를 가진 국민
- ii) 혁신적이고 경쟁력있는 국민
- iii) 공정한 민주주의
- iv) 사회발전과 전체 지역과 전체 국민 간 평등
- v) 세계적 수준의 영향력이 있는 경제·외교적인 강화

위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부와 국민 그리고 기업 등 인도네시아 구성원 전체는 국가장기개발계획을 그 기준점으로 사용하는데,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의 국가개발계획을 담고 있는 이 계획은 다시 5년씩 나누어져 총 4단계의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 2005~2009년, 2010~2014년, 2015~2019년, 2020~2025년)으로 구체화되면서, 경제개발촉진마스터플랜(MP3EI)이 이를 보완하는 구조이다(Indonesia Investment).

2)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 2015~2019)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위(Joko Widodo, '14.10.20일부터 5년의 임기) 정부는 '15.1.8일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 2015~2019)를 발표하였다.

국가중기개발계획은 앞선 국가장기개발계획(RPJPN 2005~2025)의 3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계획으로, 조코위 정부 5년간의 정책방향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인도네시아가 처한 정치적, 경제적 환경 및 당면한 문제를 밝힌 후, 향후 5년의 거시경제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개발정책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비전,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7개의 미션, 'Nawa Cita'라고 부르는 미션실행을 위한 우선적인 아젠다를 9개를 제시한다. 'Nawa Cita'는 산스크리트어로 Nawa는 9를 Cita는 바람을 뜻한다 (RPJMN 2015-2019).

- 비전 : 인도네시아의 전통적인 협력 정신을 뜻하는 Gotong-royong을 기반으로, 주권적이고 독립적이며 개성있는 인도네시아를 만들고자 함 (Terwujudnya Indonesia yang berdaulat, mandiri, dan berkepribadian berlandaskan gotong-royong)

- 미션

i) 주권 수호와 해양자원 보호를 통한 경제적 독립과 해양국가로서의 인도네시아의 특성을 반영하는 국가안보 실현

ii) 법을 기반으로 하는 선진적이고, 평등하며 민주적인 국민

iii) 자유·적극적인 외교정책 수행, 해양국가로서의 정체성 강화

iv) 인도네시아 국민 삶의 질 제고

v) 경쟁력있는 민족

vi) 국가의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독립적이고 선진적이며 강한 해양 국가

vii) 문화 안에서 개성을 가진 민족

- 9개 우선적인 아젠다 (Nawa Cita) :

i) 전체 민족을 보호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나라

ii)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정부조직

iii) 하나의 나라라는 프레임 안에서 농촌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이 살기 좋은 인도네시아

iv) 부패없고, 믿을 수 있는 법 체계를 세우고 시스템을 개혁

v) 국민의 삶의 질 향상

vi)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

- vii) 독립적인 경제 실현
- viii) 민족의 혁명 실천
- ix) 사회적 복원 및 단일성 강화

이러한 중기개발계획은 2014년의 경제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2019년까지의 거시경제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2015	2016	2017	2018	2019
인플레이션(%)	5	4	4	3.5	3.5
GDP 성장률 (%)	5.8	6.6	7.1	7.5	8
1인당 GDP (1,000 Rp)	47,804	52,686	58,489	64,721	72,217
실업률(%)	5.5~5.8	5.2~5.5	5.0~5.3	4.6~5.1	4.0~5.0

<표 2-4> RPJMN 2015~2019에서 제시한 인도네시아 주요경제지표 목표치

이러한 경제정책을 실행을 위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강국 달성을 위하여 해양산업을 활성화하고, 식량 주권 확보, 관광 및 산업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구체적 실행을 위한 계획으로는 총 29개 프로그램과 총 116개 세부적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프라와 관련한 프로그램은 16개로 RPJMN 2015~2019의 전체 예산 중 거의 90%에 해당한다. 국토의 고른 경제개발을 위하여 주택, 물과 전기 공급 등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PJMN 2015~2019에서 명시한 인도네시아의 인프라와 관련된 16개의 프로그램을 망라해보면, (1) 유료 고속도로, (2) 교량 건설, (3) 국도 건설, (4) 식수 개발, (5) 폐수 처리, (6) 고형폐기물 처리, (7) 빈민가 개선, (8) 관개수로 개발, (9) 식수 개발, (10) 댐 건설, (11) 수재해 방지, (12) 수자원 인프라 관리, (13) 저소득층 주택제공, (14) 철도 개발, (15) ICT 및 브로드캐스팅 인프라 개발, (16) 전력 인프라 개발이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650km의 국도와 1,000km의 유료도로 확장, 15개의 공항 및 24개의 항구 신설, 그리고 현재 5,424km의 철도를 8,692km까지 확장(총 3,258km 증가)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하루에 30만 배럴의 기름을 정제할 수 있는 정유공장을 건설하고,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현재의 5만 7백 메가와트의 전력 생산량을 8만 6천 6백 메가와트로 증가시킬 계획이다”(SNUAC, 2015).

RPJMN 2015~2019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한 인프라 관련 목표는 다음과 같다 (RPJMN 2015~2019).

구분	2014년 (기준)	2019년(목표)
전력량 (GW)	50.7	86.6
전력사용 (%)	81.5	96.6
1인당 전력소비량 (KWh)	843	1,200
국도 안전상태 (%)	94	98
국도 개발 (Km)	38,570	45,592
신규 도로 개발 (5년간) (Km)	1,202	2,650
신규 유료도로 (5년간) (Km)	807	1,000
철도연장 (Km)	5,434	8,692
항구개발 (개수)	278	450
항만 체류시간 (일)	6~7	3~4
공항 (개수)	237	252
항공 정시출발 비율 (%)	75	95
도시의 대중교통분담율 (%)	23	32
도시 빈민가 (Ha)	38,431	0
식수 접근 (%)	70	100
위생 시설 접근 (%)	60.9	100

<표 2-5> RPJMN 2015~2019 내 인프라개발 관련 목표치

이러한 RPJMN 2015~2019에서 제시한 개발목표를 교통과 전력 및 수자원 3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조은경, 2015).

“우선 교통부분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규 교통사업을 통해 GDP에서 차지하는 물류비의 비중을 현재 23.5%에서 2019년 19.2%로 낮추고, 국가 연계성을 위한 국가물류시스템을 국가산업으로 강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및 국제간 승객과 화물의 이동은 물론 무역과 상품유통서비스를 위하여 다양한 교통분야의 건설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향후 5년동안 국도와 유료도로를 각각 45,592km와 2,650km를 추가로 건설하고, 철도는 2014년 5,434km에서 2019년 8,692km로 60.0% 증가할 계획이다. 항만과 공항은 각각 278개와 237에서 450개와 252개로 추가 개발 및 건설 계획이다. 또한 대중교통에 대한 분담률을 23%에서 32%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둘째, 전력분야에서는 소득증가 및 도시화 가속으로 에너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지속적으로 관련 시설을 확보하되, 보다 효과적 및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따라서 향후 5년간 발전설비 용량을 35GW 증설하여 전력보급률을 81.5%에서 96.6%로 개선하고, 1인당 전력 소비량 또한 843KWh에서 1,200KWh로 증가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 및 고립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설비를 확충하고, 송·배전망 개선사업 등을 통해 전력보급률을 향상할 계획이다. 현재 전력은 민간업체와 지방기업(BUMD, Badan Usaha Milik Daerah)들에 의해 공급되지만, 판매와 관리는 국영전력회사인 PT PLN(Persero)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향후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자원 분야에서는 보다 나은 식수와 위생상태, 관 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뢰성 확보 및 지속가능성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2019년까지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위생적인 식수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안전한 수자원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에 의존하는 인도네시아의 급수시스템을 개선하여 안전한 수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거 및 경제활동으로 파괴되는 늪지대와 농경지 및 플랜테이션 농장을 보호하고, 해안지역 침식을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방안을 모색중이다. 아울러, 산업화로 인한 하천 오염, 홍수, 가뭄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수자원 관리 능력 함양도 주된 산업으로 제기되고 있다.“

3) 경제정책패키지(Paket Kebijakan Ekonomi)

위와 같은 중장기 경제개발계획 외에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더 구체화한 정책실행계획을 경제정책패키지(Paket Kebijakan Ekonomi)라는 이름으로 2015년 이후 여러 차례 발표하였다.

조코위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처음 발표한 1차 경제정책패키지의 목표를 ① 인도네시아 실물경제의 회복, ② 글로벌경기 침체상황에서 국가산업의 경쟁력 향상, ③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활성화, ④ 지역간 상품의 효과적인 유통, ⑤ 관광산업 활성화와 어민의 복지향상 총 5가지로 규정하였다(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8).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9월 9일부터 2016년 11월 9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경제정책패키지를 발표하였다. 다음에 설명하는 13차례의 경제정책패키지는 1차부터 6차까지는 KOTRA의 자료를 참고하였고, 7차부터 13차는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8)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와 관련하여 한국에는 없는 조정부(Coordination Department)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조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직접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부통령 아래로 4개의 분야(정치·법·치안, 경제, 사회문화, 해양) 별로 조정부(Coordinator Department, Kementerian Koordinator)를 두고, 조정부 관할 아래의 해당 분야의 부처(Department) 업무를 조정한다. 예를 들면, 경제조정부(Kemente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는 경제관련 부처업무를 조정하는데 관련부처로는 재정부, 인력부, 산업부, 무역부, 농업부 등 총 11개이다. 경제정책패키지와 관련한 내용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홈페이지(<https://www.ekon.go.id/ekliping/cat/paket1>)에서 제공하는 각 차수별 자료를 참고하였다.

① 1차 경제정책 패키지 (2015/9/5)

- “산업단지 추가 조성, 상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10가지의 주제로 국내 경기 부양과 사회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발표된 1차 경제정책 패키지는 89개의 규제 완화 계획, 국가 프로젝트 활성화 계획, 부동산 등 자산 관련 투자 활성화 계획으로 큰 이슈가 됨”(KOTRA)

② 2차 경제정책 패키지 (2015/9/29)

- “산업단지 투자허가 간소화, 임업 투자허가 간소화 등 5개 정책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계획이 공개됨. 이어 9월 30일에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을 통해 환율안정정책도 발표됨”(KOTRA)

③ 3차 경제정책 패키지 (2015/10/7)

- “1차, 2차 발표가 기업 사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 3차 정책 패키지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료, 가스, 전기료 인하 및 소상공인 우대 대출금리 대상 확대 등 실질적 정책이 포함돼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냄”(KOTRA)

④ 4차 경제정책 패키지 (2015/10/15)

-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초 혹은 연말에 이루어지는 노사의 임금협상 갈등이 경제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소라고 판단, 법적 규제를 통해 노사 간 마찰을 최소화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객관적 경제 지표를 활용한 최저임금 계산법을 법제화함”(KOTRA)

- “서민사업융자(KUR)는 2009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자립 경영 지원을 위한 융자 지원제도로서 기존 금리는 연 22%였으나, 4차 경제정책 패키지를 통해 12%로 하향 조정됐으며, 대상자도 더 확대돼 더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KOTRA)

⑤ 5차 경제정책 패키지 (2015/10/22)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경제정책 패키지를 통해 자산재평가를 시행하는 기업에 소득세를 감면해줄 것이라고 공표하며 자산재평가를 장려함. 이 소득세 인센티브는 공기업, 사기업 및 개인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음”(KOTRA)
- “해양조정부 Rizal Ramli 장관은 자산재평가에 따른 소득세 감세로 경제 회복이 가속화될 것으로 평가함. 공기업의 자산가치가 재평가를 통해 대폭 상승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봄. 국세청은 공기업의 자산재평가에 따른 소득세만 해도 약 10조 루피아에 달할 것이라 추산함.”(KOTRA)

⑥ 6차 경제정책 패키지 (2015/11/4)

- “경제특구(KEK, Kawasan Ekonomi Khusus)의 발전, 수자원 산업 활성화, 식품·의약품 수입절차 온라인화를 골자로 함.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는 정부규정안(RPP)에 준거해 경제특구 유치 활성화 및 지역자원 활용 증대를 통한 실업자 감소 및 지역 주민 구매력 향상을 목표로 세제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경제특구에 부여할 예정임. 인센티브 부여 예정 경제특구는 총 8곳임”(KOTRA)
- “6차 경제정책 패키지에 관해 관련 업계 및 정치권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일각에서는 경제특구가 수도권만큼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센티브 부여만으로 투자 유치에 대한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KOTRA)

⑦ 7차 경제정책 패키지 (2015/12/4)

-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와 토지허가절차의 간소화가 주요 내용임
- 수천만 종사자를 소유한 노동집약산업 뿐 아니라 노점상과 같은 개인상인들까지 아우르는 국가산업 전 계층의 산업 활동을

좀 더 활발히 하고자 함

⑧ 8차 경제정책 패키지 (2015/12/21)

- One Map Policy, 국내 정유공장 설립 과정 간소화를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도모, 비행기 유지관리 업종에 인센티브 지급이 주요 내용
- One Map Policy는 2019년까지 1:50,000 축척비율을 가진 통일된 기준과 통일된 데이터를 이용한 지도를 만드는 정책임

⑨ 9차 경제정책 패키지 (2016/1/27)

- 전력발전소 건설을 가속화하여 가정용 전력 수요 충족, 축산업 관련 육류에 대한 국내공급을 증대하면서 부족시 수출을 포함한 육류 공급을 촉진하여 가격 안정화, 물류 관련 규제완화가 주요 내용임. 또한 전력공급 능력(현재 87.5%) 2019년 97.2%까지 올림.
- 물류 관련 규제완화는 상업적 물류서비스 기업 활성화, 선박 서비스 비용지불을 전자화하는 방식으로 일원화, 중소기업 수출 촉진 부서 신설 등을 포함함

⑩ 10차 경제정책 패키지 (2016/2/15)

- 핵심은 중소기업 보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투자와 관련하여 자유를 최대한 부여하고 정부가 보호함.
- 법령을 개정하여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목록에 19개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고 기업의 가치를 10억 루피아에서 500억 루피아까지로 확대함

⑪ 11차 경제정책 패키지 (2016/3/29)

- 글로벌 경제 침체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국내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4가지 주요내용이 있음
- 수출중심 중소기업의 수출비용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 인프라

와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정부부처와 관련기관 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역품 수출입 절차에 걸리는 시간단축, 국내 약값 인하를 촉진하고 건강보험 차원의 보건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약품·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도모

⑫ 12차 경제정책 패키지 (2016/4/28)

- 기업환경지수 40위권대로 진입(현재 100위권 이하)을 목표로 하는 다수의 법령 제정을 포함
- 허가 절차 간소화, 비용인하, 시간단축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구축

⑬ 13차 경제정책 패키지 (2016/8/24)

-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정책으로, 주택 100만호 건설 프로그램
- 허가절차 간소화(33개→11개) 및 비용 감소(70% 정도)

⑭ 14차 경제정책 패키지 (2016/10/25)

- 정책명은 E-Commerce 로드맵임
-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용자는 1억명에 가까울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많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7100만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2020년 인도네시아를 동남아시아 최대 디지털국가로 도약시킴

4) 민관협력제도

이러한 인도네시아 경제정책은 인프라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2018년 개최되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개발 필요성은 매우 높다.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글로벌 인프라지수에도 나타난다. 인도네시아의 인프라지수는 4.2로 전체 138개국 중 60위를 기록하여 주변국인 말레이시아와 태국보다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도로(75위), 항구(79위), 전력공급(89위) 등이 낮은 순위를 기록하여 이 분야의 인프라가 취약함을 알 수 있다. 2014-2015년의 인프라지수(4.4로 144개국 중 56위)와 2015-2016년의 인프라지수(4.2로 140개국 중 62위)와 비교하면 하락 또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 인프라 현황은 양적과 질적 수준이 모두 낮은 상태로, 성장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인프라 개발의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력공급 품질	인프라	철도인프라 품질	항만인프라 품질	도로인프라 품질	항공인프라 품질
한국	6.2(29)	6.0(10)	5.5(9)	5.2(27)	5.6(14)	5.7(21)
말레이시아	5.8(39)	5.4(24)	5.1(15)	5.4(17)	5.5(20)	5.7(20)
태국	5.1(61)	4.4(49)	2.5(77)	4.2(65)	4.2(60)	5.0(43)
인도네시아	4.2(89)	4.2(60)	3.8(39)	3.9(79)	3.9(75)	4.5(62)
베트남	4.4(85)	3.9(79)	3.1(52)	3.8(77)	3.5(89)	4.1(86)

<표 2-6> 글로벌 인프라 지수 (2016-2017)

출처 : World Economic Forum (2016),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6 - 2017,

* 지수는 1~7까지이며 7이 가장 높은 지수이며, ()안은 전체순위임

하지만, 인프라 관련 대부분의 공사들은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공사에 필요한 자금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이다. 부족한 자금 확보를 위해 조코위 대통령은 전 정권에서 계획했던 국가 예산을 일부 변경하고 유류보조금 철폐·삭감 등의 과감한 조치들을 실행했다. 하지만 이렇게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공하는 자금만으로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실행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중기경제개발계획(RPJMN 2015-2019)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은 대략 4,610억 달러(약 5,452조 루피아)로 추정된다. 이 중 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은 전체 필요비용의 약 22%에 불과하다. 이 외, 국영 공기업으로부터 6%, 민관협력사업으로부터 약

20%의 자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가정해도 약 50% 정도는 부족하다(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2014).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족한 예산을 차관을 통하여 충당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PPP 사업과 외부 차관을 통한 투자금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인프라 투자에서 민간 영역이 차지하는 몫이 1995-97년 사이에 30%였지만, 최근 10%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World Bank, 2014).

“인도네시아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고려하는 민간 기업들은 투자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PPP 프로젝트의 선정절차와 입찰과정의 투명성 부족을 꼽는다. 또한 PPP에 참여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된 규정이 많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규가 충돌하는 것도 투자를 저하시키는 원인이다”(SNUAC, 2015.8).

PPP는 철도, 도로,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 부문을 참여시킴으로써 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면서 민간부문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부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위험을 함께 공유한다.

“민간 부문은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여 일정한 위험을 감당하고 이윤을 획득한다. 민관협력제도는 ① 장기계약에 의한 정부와 민간 기업의 위험 공유, ② 건설과 자본 조달, 시설 운영 책임의 결합(task bundling)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나타낸다”(ADB 2012, pp. 6-7, pp. 27-28).

“민관협력사업의 계약은 보통 20년에서 50년에 걸친 장기계약이므로 민관협력제도 하에서 민간기업은 상당한 위험을 부담한다. 다양

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사와 투자회사, 운영사가 하나의 사업단(consortium)을 구성하고 정부는 이 사업단과 계약을 체결한다. 사업단은 계약에 따라 민관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는 계약 이행을 점검한다”(강대창, 김유미, 2013).

2000년대 중반까지 인도네시아는 PPP제도에 대한 각종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PPP사업을 시행해 오다가 2005년 대통령령을 통하여 PPP제도를 최초로 법제화하였다. 이와 함께 PPP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회기반시설 정책위원회(KKPPI: Komite Kebijakan Percepatan Pembangunan Infrastruktur)와 PPP사업추진을 총괄하는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를 설립하였고, 대통령령 제13호(2010)와 대통령령 제56호(2011), 재무부 장관령 38호(2006년), 경제조정부 장관령 4호(2006년), 정부령 35호(2009년)를 법규화하여 PPP사업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

“PPP사업과 관련된 법규가 마련되기 이전인 2005년까지는 PPP 사업을 정부가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에 직접 할당하여 시행하였으나, 2005년 이후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민간부문이 경쟁입찰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정한 PPP사업의 설계·건설·자금조달·운영 등 전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PPP사업 경쟁입찰에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강명구, 2017).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PPP사업에서 추진구조를 살펴보면, 사회기반시설 정책위원회(KKPPI: Komite Kebijakan Percepatan Pembangunan Infrastruktur)는 인도네시아 PPP사업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기관으로 PPP사업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기반시설 정책위원회는 PPP사업과 관련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정부계약기관(GCA: government contracting agency),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재무부가 PPP사업에 대한 정책 입

안과 조정, 프로젝트 개발, 재정 지원과 보증, 자금 지원, 토지 수용, 프로젝트 홍보 등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위의 3개 국가기관 간의 협력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PPP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 기관 간의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강명구, 2017).

“인도네시아의 PPP사업은 사업검토, 입찰단계, 입찰완료 등의 과정을 거친다. 다음 표에서처럼 2017년 현재 PPP사업은 사업검토 단계 21개, 입찰단계 1개, 입찰이 완료된 사업 17개 총 39개다. 입찰이 완료된 PPP사업 중에서 도로건설이 11개로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신 3개, 수자원·발전·폐기물처리시설이 각각 1개씩이다. 입찰이 완료된 17개 PPP사업 중에서 Batang에서 Semarang까지의 75km 유료도로 건설사업인 ‘Batang-Semarang Toll Road’ 등 4개 사업은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서자바지역의 Surabaya군 유료도로 건설사업인 ‘Pandaan-Malang Toll Road’ 등 7개 사업은 건설 중에 있다. 2016년 말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계약을 완료하고 건설 단계에 있는 PPP사업은 외국기업의 참여 없이 순수하게 자국의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강명구, 2017).



<그림 2-1> 인도네시아 PPP 추진현황

3. 한국과 인도네시아 교류 현황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국가는 2000년대 이후 투자와 교역, 그리고 정부간 협력 등 여러 부문에서의 협력관계를 확대해왔다. 투자를 보면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수로는 세계 6위, 투자금액으로는 세계 10위를 차지할 만큼 한국의 주요 투자국이기도 하다.

(단위 : 개, 백만 달러)

	합계	기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인도네시아
진출기업	69,580	19,789	26,303	13,595	4,738	3,165	1,990
구성비	100%	28.5%	37.8%	19.5%	6.8%	4.5%	2.9%
투자금액	352,908	185,766	56,451	77,996	15,266	7,809	9,620
구성비	100%	52.7%	16.0%	22.1%	4.3%	2.2%	2.7%

<표 3-1> 한국의 해외투자 현황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이번 장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국가간의 경제적인 교류현황을 정부의 경제협력과 그 외 무역 현황으로 나누어 본 후, 두 국가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가. 양국 정부간 경제협력 현황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1966년 영사 관계 수립과 1973년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 투자은행들과 주요 언론에서 인도네시아가 BRICs에 이어 세계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로 분석되면서 한국과

의 경제사회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도 인도네시아가 내수 소비시장과 국내외 투자 증가 등으로 세계 평균인 5%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보였으며, 재정적자 또한 1%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국가 발전을 지속하는 것에 기인하기도 한다. 외교적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양자 협력 관계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던 1971년 인도네시아와 경제 및 기술 협력과 통상 증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후 임업, 항공, 투자보장, EDCF, 자원협력과 도로에 대한 협정 등을 통해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왔다. 이러한 양국간 협력 관계는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양국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13).

최근 두 국가는 ‘12.7월부터 FTA(자유무역협정)를 포함한 CEP(A9)를 체결하기 위해 총 7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14.2.25일부터 4일동안 서울에서 개최한 7차 협상에서 인도네시아 측에서 한국기업의 투자확대 요구로 최종합의가 결렬된 이후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CEPA 외에도, 두 국가간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를 위한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

“RCEP는 200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지역경제통합 논의(TP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한·중·일 FTA 추진 등)가 활성화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체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11년 11월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담에서 RCEP 작업계획이 제시된 이후,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한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논의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러한 RCEP는 2013년 5월 공식협상을 시작하여 역내 국가

9)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 (Comprehensive and high quality)의 FTA 체결을 목표로 한다”(KOTRA, 2016).

가장 최근 RCEP 협상은 제16차로 16.12.6일부터 5일간 인도네시아 땅그랑(Tangerang)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이외에도 우리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 경제협력실무회의의 또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경제협력실무회의는 2016년 4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6차 한국-인도네시아 경제협력실무회의로, 한국측 7개 부처와 기업인으로 구성된 60여명의 대표단과 인도네시아측 15개 부처와 기업인으로 구성된 8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¹⁰⁾하여 무역투자, 산업, 에너지, 농림수산, 인프라, 환경, 금융, 방산, 창조산업 총 9개 분과회의로 나누어 논의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6/4/27).

10) 한국 측 참석부처 (7개) :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방위사업청

인도네시아 측 참석부처 (15개) : 재무부, 외교부, 국방부, 무역부, 산업부, 에너지자원부, 농업부, 해양수산부, 환경산림부, 공공근로주택부, 교통부, 연구·기술·고등교육부, 창조경제위원회, 국가개발계획청

나. 양국간 무역 현황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인구대국으로 인구의 약 66%가 생산가능 인구, 61%가 35세 미만의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풍부한 노동력과 역동적인 소비자 층을 갖춘 유망한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기준 한국의 9위 수출대상국으로 수출액은 총 113.6억 달러를 기록했고,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 싱가포르, 일본에 이은 4위 수입대상국으로,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수출 중 자본재가 90% 가까이 차지하지만, 2012년을 기점으로 소비재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액은 2015년 9월 누계액 기준 135억 달러로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영국, 미국에 이은 7위 규모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양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각종 항구개발 프로젝트와 도로건설 등을 계획 중에 있어 한국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한국무역협회).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은 2001~2011년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인 후 2012년부터는 하향세로 반전되어, 2015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13위 수출대상국으로 수출액은 79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입도 수출과 비슷한 추세로 2011년부터 하향세를 보인다. 무역수지는 꾸준히 적자를 유지해 왔으나 2010년 이후 적자폭이 축소되는 추세이다”(한국무역협회).

(단위 : 백만 달러, %)

	2011	2012	2013	2014	2015
교역액	30,780	29,631	24,758	23,627	16,722
수출	13,564	13,955	11,568	11,361	7,872
수입	17,216	15,676	13,190	12,266	8,850
무역수지	-3,652	-1,721	-1,622	-905	-978

<표 3-2>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현황 : 출처 -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에 대한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 철강판, 편직물, 합성수지 등으로, 2015년 석유제품이 1,970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48.5%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중 섬유및화학기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의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총 수출액 또한 7,872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30.7% 감소하였다(한국무역협회).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14년		2015년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총계	11,361	-1.8	7,872	-30.7
1	석유제품	3,826	15.3	1,970	-48.5
2	철강판	909	-5.0	619	-31.9
3	편직물	640	1.8	576	-10.0
4	합성수지	574	-10.2	424	-26.2
5	합성고무	242	-13.7	194	-19.7
6	섬유및화학기계	139	-24.4	149	7.7
7	영상기기	175	24.1	146	-16.6
8	인조장섬유직물	135	1.2	130	-3.8
9	정밀화학연료	149	3.9	126	-15.2
10	플라스틱 제품	133	12.7	124	-6.4

<표 3-3>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현황 : 출처 -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주요 수입품목은 천연가스, 석탄, 원유, 석유제품 등의 원자재와 의류가 있는데, 2015년에는 석탄, 천연가스, 원유 등의 원자재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반면 의류의 수입은 1.3% 증가하였다(한국무역협회).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14년		2015년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총계	12,266	-7.0	8,850	-27.8
1	석탄	2,409	-8.7	1,805	-25.1
2	천연가스	3,773	-5.9	1,592	-57.8
3	의류	485	16.3	491	1.3
4	동광	242	-31.8	473	95.9
5	원유	747	-38.7	443	-40.6
6	석유제품	655	-6.7	291	-55.7
7	제지원료	295	-18.9	283	-3.9
8	목재류	244	33.8	280	14.8
9	식물성물질	366	36.1	278	-23.9
10	임산부산물	317	-21.3	272	-14.4

<표 3-4>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입현황 : 출처 - 한국무역협회

다. 양국간 상대국에 대한 인식

드라마와 케이팝으로 대변되는 한류 열풍은 인도네시아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선호를 높이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는데 반해, 한국인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인지도는 많이 떨어져 그 격차가 매우 크다.

1) 인도네시아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

인도네시아에서 한류의 바람은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 한국드라마를 자국드라마보다 더 좋아하고, 젊은층 뿐만 아니라 중년층도 한국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례로 배우 중에서는 이민호가 특히 인기가 많은데, 그가 촬영한 현지 유명커피 광고가 매일 TV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불법다운로드가 아직 만연한 인도네시아에서는 PC방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젊은이들은 한국드라마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다.

단지 한국산이라는 것만으로도 인기를 얻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저가화장품인 브랜드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서너배의 비싼 가격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최근에는 불닭볶음면이 삼양면(Mie Samyang)이라는 이름으로 매우 인기가 많은데 특히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불닭볶음면의 매운맛에 도전하는 것이 유행이 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한류에 대한 인도네시아인의 관심은 매우 높고, 당연히 한국에 대한 인지도 및 호감도도 매우 높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인의 한국에 대한 높은 선호도는 한국관광공사의 최근 조사결과에서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1월 한국관광공사는 전문 조사업체 닐슨코리아와 공동 시행한 ‘2016 한국관광 광고홍보 마케팅 효과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2%가 관광목적지로서 한국을 인지하고, 57.5%가 관광목적지로서 한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광목적지 인지도는 평균 64.1%였으며, 선호도 역시 평균 67.2%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아시아국가에서의 인지도는 평균 2%p 상승하였고, 선호도에서도 평균 1.5%p 상승한 결과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의 인지도와 선호도가 각각 6.9%p, 9.1%p로 급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다”(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 2017.1.12.).

<표 3-5> 국가별 한국관광 인지도 및 선호도 조사 Top 5 결과

(단위 : %)

한국관광 국가별 인지도				한국관광 국가별 선호도			
	국가	2015	2016		국가	2015	2016
1	태국	79.6	84.0	1	베트남	75.7	78.3
2	중국	84.8	81.6	2	태국	76.7	77.7
3	인도네시아	64.0	70.9	3	필리핀	75.7	77.7
4	베트남	69.4	69.6	4	중국	80.4	76.8
5	홍콩	63.9	68.7	5	인도네시아	66.8	75.9
전체		52.5	53.2	전체		56.2	57.5

세계 주요 20개국의 12,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인도네시아는 20개 국가 중 인지도는 3위를, 5위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 대비 상승률은 가장 높았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국가의 경제적 관계에서 수·출입을 통한 무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분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하였고, 그 결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인도네시아인의 수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른, 최근 몇 년간의 전체 외국인 그리고 중국인, 일본인, 인도네시아인의 한국방문에 대한 추세에도 나타난다.

연도	전체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방문객수	증감율 (%)	방문객수	증감율 (%)	점유율 (%)	방문객수	증감율 (%)	점유율 (%)	방문객수	증감율 (%)	점유율 (%)
2009	7,817,533	13.4	80,988	0.0	1.0	1,342,317	14.9	17.2	3,053,311	28.4	39.1
2010	8,797,658	12.5	95,239	17.6	1.1	1,875,157	39.7	21.3	3,023,009	-1.0	34.4
2011	9,794,796	11.3	124,474	30.7	1.3	2,220,196	18.4	22.7	3,289,051	8.8	33.6
2012	11,140,028	13.7	149,247	19.9	1.3	2,836,892	27.8	25.5	3,518,792	7.0	31.6
2013	12,175,550	9.3	189,189	26.8	1.6	4,326,869	52.5	35.5	2,747,750	-21.9	22.6
2014	14,201,516	16.6	208,329	10.1	1.5	6,126,865	41.6	43.1	2,280,434	-17.0	16.1
2015	13,231,651	-6.8	193,590	-7.1	1.5	5,984,170	-2.3	45.2	1,837,782	-19.4	13.9
2016	17,241,823	30	295,461	52.6	1.7	8,067,722	34.8	46.8	2,297,893	25.0	13.3

<표 3-6> 한국 방문 외국인수 : 출처 - 한국관광공사

위 표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는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전체적인 방문객 감소 현상이 발생하였던 2015년을 제외하면, 매해 대략 10% 이상씩 증가였다. 국적별로는 2012년까지 1위를 기록한 일본 방문객이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기점으로 점점 줄어들었고, 2016년에는 전체 외국인 방문객의 약 13%까지 줄어들었다.

반면에, 중국 방문객은 해마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2013년부터 전체 외국인 방문객 중 1위를 기록하였고, 2016년에는 전체 외국인 방문객의 절반을 기록하게 된다. 이렇게 한국 방문 외국인의 국적별 통계에서 일본과 중국이 해마다 5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한국의 관광정책 역시 일본과 중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인의 한국 입국 통계를 다시 보면, 전체 외국인 방문객 대비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2009년 약 8만명으로(약 1%)에 불과했던 것이 2016년에는 약 30만명으로 3.5배 이상 급증하였고, 전체 외국인 방문객 대비 1.7%를 기록할 만큼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인의 한국 방문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을 이 통계에서도 알 수 있다.

2) 한국인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인식

이와는 반대로, 한국인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 인도네시아를 인도로 잘못 알고 있거나 발리가 인도네시아의 섬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의 상대국에 대한 인지도 및 호감도는 그 격차가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특히나 ISIS로 인하여 이슬람에 대한 매우 부정적 시각을 가진 한국에선 인도네시아가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이슬람국가라는 아니지만 인구의 87% 정도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로 인식되는 상황은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더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이슬람에 대한 배타적 인식은 서구가 비서구 사회를 지배하는 담론으로 인식한 오리엔탈리즘의 사고가 그 영향을 끼쳤다. 즉 서구에서 이해한 이슬람에 대한 지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이해하고 무슬림을 인식하였다.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이슬람에 대한 이해는 무슬림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양산해 왔다. 또한 한국 사회에 유입된 아시아 지역의 무슬림에 대한 ‘차이’와 ‘다름’을 ‘차별’과 ‘편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한 일부 개신교는 한국의 이슬람 유입을 우려하며 그들을 폭력의 종교로 설명하며, 선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특히 꾸란에서 표현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개종 강요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며 이슬람을 경계하고 있다. 이슬람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한 이들이 개신교에 의해 이슬람을 인식하게 되면 이는 비난과 오해, 편견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일어난 폭력과 테러 행위로 인해 전체 이슬람을 폭력의 종교로 오해하고 있다.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한 오해는 이슬람을 폭력의 종교로 인식하게 되었고, 무슬림에 대해서 배타적 태도를 취하게 만들고 있다. 이슬람은 세계의 단일 종교로서는 가장 큰

종교이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한국에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슬람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박지영, 2015).

최근에는 유럽 각지에서 ISIS에 의한 테러가 빈번한데, 특히 영국에서는 2017년 6월까지 총 3번의 테러¹¹⁾가 발생하여 테러에 대한 세계인의 공포가 큰 상황이다. 또한 필리핀에서는 ISIS가 민다나오 섬을 점령하고 정부와 대립하면서 2017년 5월 정부의 계엄령 선포 등 전 세계적으로 ISIS에 대한 공포심리가 커지고, 이로 인해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016년 1월 12일 발생한 폭탄테러는 ISIS가 아시아에서 일으킨 최초의 테러이다. 그 이후에도 2017년 5월 25일 자카르타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인 인도네시아 역시 테러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인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인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인지도를 수치로 확인하기 위해 한국인의 해외방문 통계를 살펴보자.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중국, 일본 순이고, 증가율을 보면, 일본의 경우 매해 높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 2015년 중국 방문 한국인의 수와 그 차이가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 방문 한국인수는 해마다 소폭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차츰 감소하여 2015년에는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인의 한국방문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는 반대로 한국인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정체되어, 인지도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11) 런던의사당(3.22일), 맨체스터 아레나 콘서트장 (5.22일), 런던브리지 (6.3일)

<표 3-7> 한국인의 해외방문 국가별 통계 : 출처 - 한국관광공사¹²⁾

연도	전체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방문객수	증감율 (%)	방문객수	증감율 (%)	방문객수	증감율 (%)	방문객수	증감율 (%)	점유율 (%)
2012	13,736,976	8.2	2,042,775	23.2%	4,069,900	-2.8	328,989	2.6	2.4
2013	14,846,485	8.1	2,456,165	20.2%	3,969,000	-2.5	351,154	6.7	2.7
2014	16,080,684	8.3	2,755,313	12.2%	4,181,800	5.4	352,004	0.24	2.1
2015	19,310,430	20.1	4,002,052	45.2%	4,444,400	6.3	375,586	6.7	1.9
2016	22,383,190	15.9	5,090,502	27.2%	-	-	-	-	

한국인의 인도네시아 방문과 관련하여, 다음 표와 같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외국인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인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점유율은 오히려 최근 몇 년간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인도네시아 통계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인방문객수(점유율)	296,060 (5.4%)	320,596 (5.3%)	328,989 (5.2%)	351,154 (5.1%)	352,004 (4.7%)	375,586 (4.6%)
전체외국인	5,527,342	6,050,406	6,376,166	6,943,413	7,475,049	8,096,372

<표 3-8> 인도네시아 방문 외국인수 : 출처 - 인도네시아 통계청

이와 같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국가간 인지도와 호감도는 큰 격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상대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12)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06년 7월부터 출국카드작성 폐지로 행선지별 집계 불가하여, 방문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가공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경우 현지의 문화를 이해하고 협력의 노력을 기울인 기업이 성공한 사례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이다. 무엇보다도 인구의 80% 이상이 무슬림인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사업이나 문화교류, 관광사업 등 각종 경제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무슬림을 이해해야 한다.

4.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개발협력 정책

국제개발협력(IDC,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이란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한다. 이전까지는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Foreign Aid), 해외원조(Overseas Aid) 등의 용어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에 사용되는 개발재원은 ODA, 기타공적자금, 민간자금의 흐름, 민간증여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중에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원을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한다. 공적개발원조(ODA)란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뜻하는데, 따라서 군사적 지원, 평화 유지를 위한 자금 및 인력 투입, 사회/문화적 교류 프로그램 등 수원국이 아닌 공여국을 위한 활동은 ODA의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KOICA 홈페이지)¹³⁾.

“ODA는 전달경로에 따라 크게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나뉘며, 양자원조는 다시 협력대상국의 상환 의무 유무에 따라 무상원조(Grant, 증여)와 유상원조(Concessional loan, 양허성 차관)의 형태로 구분된다. 무상원조는 협력대상국에 법적 채무를 동반하지 않는 현금 또는 현물, 기술 등을 이전하는 것으로 협력대상국은 공여받은 ODA 지원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다. 이에 반해 유상원조는 개발도상국의 민간자금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공여되는 양허성 공공차관, 법적 채무를 동반하는 현금 또는 현물이전을 의미하며, 협력대상국은 공여국으로부터 공여

13)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1_S01.jsp

받은 ODA 지원을 상환할 의무를 지닌다. 다자원조는 협력대상국의 경제, 사회 개발 및 환경, 빈곤, 여성개발 등 범분야(Crosscutting) 과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UN 등의 국제기구 활동에 대해 재정적으로 기여(Contribution)하거나,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 Development Bank) 등의 다자개발은행에 자본금을 출자(Subscriptions)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협력방식으로 구성된다. 한편, ODA를 경쟁 입찰 제한 등 조건 부과 여부에 따라서 구속성(Tied) 원조와 비구속성(Untied) 원조로 구분하기도 한다. 구속성 원조는 ODA 사업에 대한 입찰자격을 해당 공여국 또는 일부 국가에게만 부여하거나 물자 및 서비스 등의 조달처를 제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비구속성 원조는 입찰자격에 대한 제한 없이, 협력대상국이 관련 물자 및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대한민국 ODA 백서, 2014).

“국제사회에서는 1965년 UN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UN개발프로그램(UN Development Program; UNDP)이 창립하여 활동하였고, 2000년의 밀레니엄 UN 정상회의(UN Millennium Summit)에서 2015년을 목표로 8개의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로 맺어지게 되었다. UN회원국들은 MDGs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18개의 세부지표를 통해 IDC를 구체적으로 실행, 관리해왔고,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 완화, 깨끗한 식수에의 접근성, 보편 초등교육의 달성, 아동 사망률 감소 등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왔다”(UNDP, 2015; 박경환·윤희주, 2015).

“또한, UN 회원국들은 2012년의 Rio+20 회의에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연계하여 포스트-2015 개발 목표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2015년 9월 UN 당사국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UN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이른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발표하였다. UN 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에서의 모든 유형과 모든 차원의 빈곤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2030년까지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지표를 달성하기로 결정했고 (UNDP, 2015), 이 목표는 UNDP나 OECD/DAC 등 해외원조 관련기구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원조기관 및 개발NGO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박경환·윤희주, 2015).

이와 같이, 국제사회는 2000년에 수립한 새천년개발목표(MDGs)¹⁴⁾ 달성에서 2015년부터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¹⁵⁾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으로,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해 개도국을 위한 공여국들의 공적개발원조(ODA) 재원이 과거에 비해 감소세로 돌아섬에 따라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공공-민간부문의 협력 방안 없이는 개도국의 실질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다양한 공공과 민간부문의 협력 방안이 최근 국제사회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가져오는 현지 기업활동에 필요한 법·제도 및 인프라의 구축, 비즈니스 환경개선 등 다양한 개발 과제에 직면한 반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주도의 원조와 투자만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2011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서는 개발협력에 있어 민간부문의 참여 (민간부문과의 협력)가 주요 이슈로 논의 되었으며, 민간의 참여와 협력은 對 개도국 개발협력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성 제고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對 개도국 진출기반 확보와 수출증진이라는 국익 차원에서 도 그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EDCF Issue Paper, 2012.8).

14) MDGs (밀레니엄개발목표)

1. 극한적인 가난과 기아 퇴치
2. 초등교육의 확대와 보장
3. 남녀평등과 여성 권익 신장
4. 유아 사망률 감소
5. 임산부 건강 개선
6. 에이즈, 말라리아, 기타 질병 퇴치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
8. 개발을 위한 전 세계적 협력 구축

15)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1. 빈곤퇴치, 2. 기아와 농업, 3. 보건, 4. 교육, 5. 양성평등, 6. 물과 위생, 7.에너지, 8. 경제성장, 9. 산업화, 10. 불평등, 11. 지속가능도시, 12. 지속가능소비생산, 13. 기후변화, 14. 해양자원, 15. 생물 다양성, 생태계, 16. 평화,제도, 17. 이행수단, 글로벌파트너십

가.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

“한국의 개발협력 역사를 살펴 보면, 한국은 독립 이후 국제사회의 공적원개발원조를 받으며 경제개발에 도움을 받아 오다가, 1990년대에는 원조 수원국에서 순수 원조 공여국으로의 원조지위가 바뀌게 되었고, 1995년에는 세계은행의 차관 졸업국이 되었다. 한편,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에 즈음하여 외채 감축과 국제수지 흑자의 실현으로 한국은 본격적인 공여국으로서의 개발원조를 본격화하게 된다. 우리의 경제규모 증가와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제고로 그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 수행이 요청된 때문이기도 하고,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개도국에 대한 수출증진 및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ODA 증대를 통한 개도국과의 협력강화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KOICA 홈페이지).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발협력정책 중 양자협력은 유상원조로는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과, 무상원조로는 외교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원조사업이 있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등의 개별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도 원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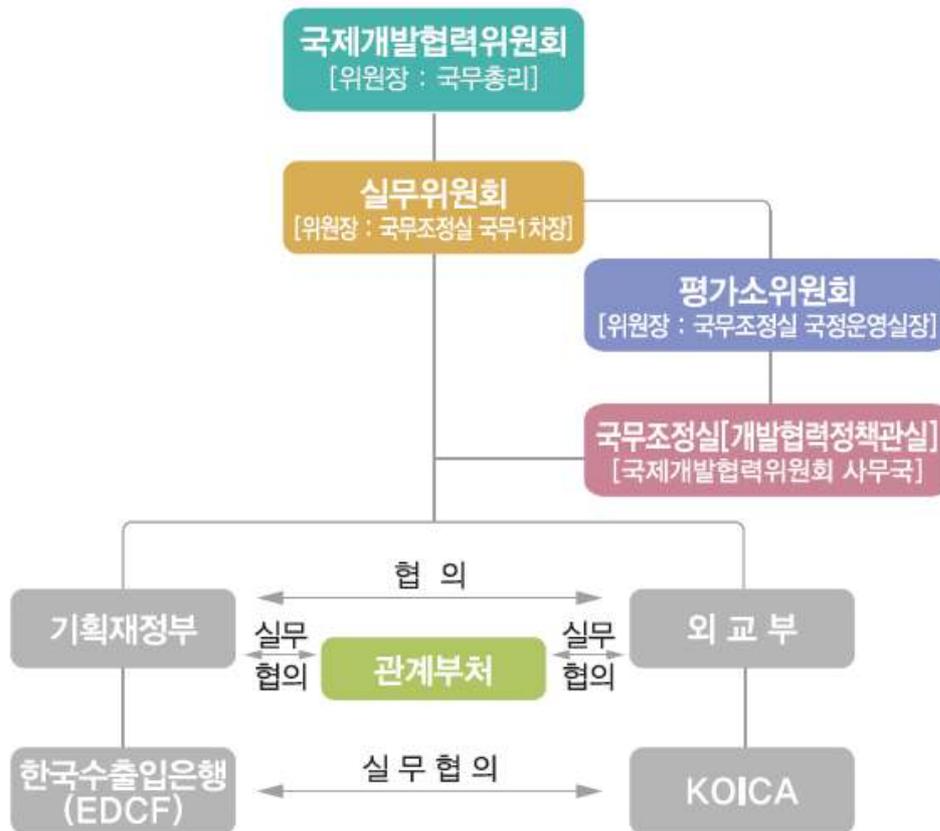
이러한 양자협력 외에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다자원조와 외교부 주관으로 UN산하기관 등의 기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도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한국 정부는 2006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¹⁶⁾를 설치하고, 기획재

16)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개발협력에 관한 중요정책, 개발협력 중기기본계획,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정부와 외교부 등 정부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ODA 집행기관간의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매해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림 4-1>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추진 체계



※ 출처 : EDCF 안내 책자, 2015

심의 조정한다.

“이후 2010년에는 ODA 정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원조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관련 시행령을 제정하였으며, 2010년 10월에는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으로 기본정신, 추진방향, 추진전략 등을 포함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 선진화방안의 기본골격은 2015년까지 GNI대비 0.25%로 원조규모를 확대하고, 지역별로는 유무상 통합 26개 중점 협력국을 선정하여 양자예산의 70% 이상을 집중하고, 이 중 아시아에 양자원조의 55%를 분배함으로써 최우선 중점지원기조를 유지하며, 다음으로 20%는 아프리카에 지원하는 것이다. 원조형태면에서는 프로젝트 위주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산지원의 도입을 검토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기술협력을 수원국 개발환경에 맞추어 균형 있게 추진하고, 유상과 무상 비율은 40:60으로 유지하며,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15년까지 75%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명시하였다. 또한 다자원조는 전체 ODA의 30% 비율로 지원되며, MDGs 달성 분야 및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범지구적 개발문제에 대처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을 명시하였다”(KOICA 홈페이지).

<그림 4-2>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 출처 : KOICA 홈페이지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2/T02/L01_S03.jsp)

이와 같이, 국가차원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2010년 제정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시행령,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기반으로 하여, 5개년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연간 분야별 종합시행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그간 각 추진기관별로 분산되어 추진하던 것을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10년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

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한국의 대외원조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중점협력국 선정에 관한 사안이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며 26개의 중점협력국(Priority Country)을 선정하였고 이들 국가에 대한 국가지원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개발협력전략은 제한된 규모의 원조재원으로 인해 ‘선택과 집중’ 원칙을 반영하여 유무상원조 통합의 중점협력국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국가들에 대해 양자원조의 70% 이상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조원빈 외, 2015).

여기에서 중점협력국은 1차로 26개국을 선정하였으나, 2015년 발표한 5개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는 1차에 선정한 중점협력국이 백과사전식 기술로 선택과 집중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지난 5년간 운용 결과 원조실적이 극히 부진한 국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24개국을 재선정하였다¹⁷⁾(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

이러한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추진한 결과, 한국은 ODA 규모 지속 확대 이후, 2011년 약 1.5조원 규모였던 총 ODA 사업예산은 2015년에는 2조원을 넘어섰고, 2017년에는 2.6조원에 달한다.

17) * 1차 중점협력국 총 26개국 : 아시아 11개국 (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필리핀,방글라데시,몽골, 라오스,네팔, 스리랑카,파키스탄,동티모르), 아프리카 8개국 (가나,에티오피아,모잠비크,르완다, 우간다,콩고,나이지리아,카메룬, 중동 2개국 (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 중남미 4개국 (콜롬비아,페루, 볼리비아,파라과이), 오세아니아 1개국 (솔로몬군도)

* 2차 중점협력국 총 24개국 : 아시아 11개국 (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필리핀,방글라데시,몽골, 라오스,네팔, 스리랑카,파키스탄,미얀마), 아프리카 7개국 (가나,에티오피아,모잠비크,르완다, 우간다, 콩고,탄자니아,세네갈), 중동 2개국 (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 중남미 4개국 (콜롬비아,페루,볼리비아,파라과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ODA(십억원)	1,466.7	1,798.6	1,921.4	1,955.2	2,161.9	2,439.4	2,635.9
양자간원조 비중(%)	1,095.8 (74.7)	1,332.1 (74.1)	1,433.4 (74.6)	1,469.8 (75.2)	1,649.8 (76.3)	1,947.9 (79.9)	2,130.0 (80.7)
무상원조 비중(%)	636.7 (58.1)	804.9 (60.4)	885.5 (61.8)	930.5 (63.3)	1,016.0 (61.6)	1,054.2 (54.1)	1,175.5 (55.2)
유상원조 비중(%)	459.1 (41.9)	527.3 (39.6)	547.9 (38.2)	539.3 (36.7)	633.8 (38.4)	893.7 (45.9)	954.5 (44.8)
다자간원조 비중(%)	370.9 (25.3)	466.4 (25.9)	487.9 (25.4)	485.4 (24.8)	512.2 (23.7)	491.5 (20.1)	505.9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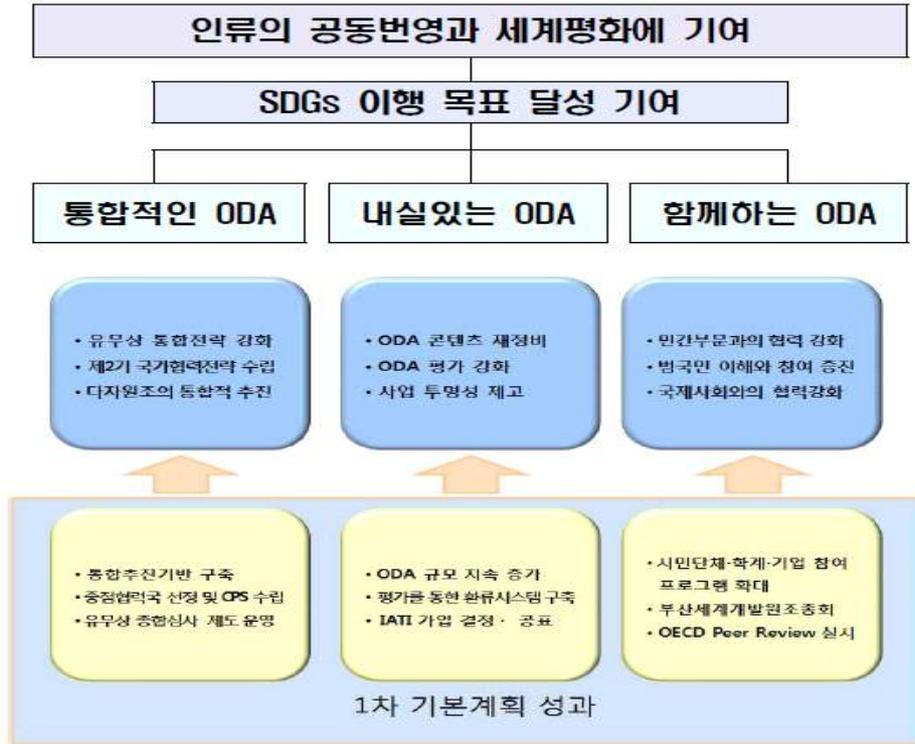
* '14년까지는 OECD에서 확정 발표된 수치이며, '15년은 잠정, '16년·'17년은 예산

<표 4-1> 한국의 ODA 지원금액

※ 출처 :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16.12)

그러나 이러한 ODA 지원금액은 양적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재정상황 악화와 복지재정 수요 지속적 확대 등 다른 분야의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ODA 재원 확대가 어려워, ODA/GNI 비율은 2011년 0.12%에서 2015년 0.14%로 0.02% 상승에 그쳐,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에서 설정한 목표인 0.25%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림 4-3> 한국의 ODA 규모 및 ODA/GNI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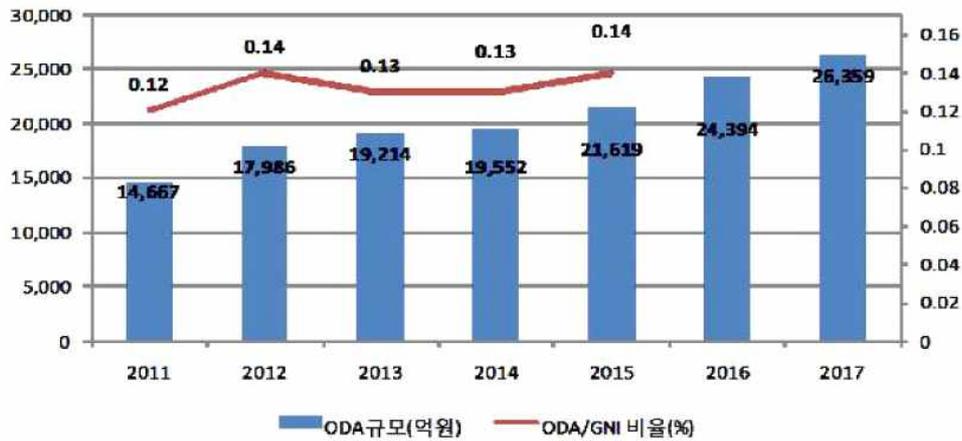
※ 출처 :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16.12)

이에 따라, 2015년 발표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8)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은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ODA/GNI 비율의 목표치 역시 하향조정하여 2020년 0.20%로, 2030년에는 DAC19) 회원국 현 평균수준인 0.30%로 설정하였다. 또한, 유상과 무상의 비율은 기존 목표치인 40:60을 2017년까지 유지하기로 하였다20).

18) 본 계획은 향후 5개년인 2016년~2020년까지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다.

19) OECD에 속해 있는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는 공적개발원조 공여국들의 대표적인 협의체로서 29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DAC 회원국 전체 ODA 규모는 명목상 1,351억불이고, GNI대비 ODA비율은 평균 0.30%이며, 유엔이 제시한 ODA 목표치인 GNI대비 0.7%를 넘어서는 회원국은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이다. DAC 회원국 중 ODA 지원규모 상위 5개국은 미국(315억불), 영국(179억불), 독일(142억불), 일본(118억불), 프랑스(113억불) 순이다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4_S01_01.jsp).

20) ODA 계상방식을 순지출 기준에서 인정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민간재원 활용방안 도입 등을 고려하여 '17년 상반기에 '18~'20년 비율을 재설정할 예정이다.



<그림 4-4>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비전과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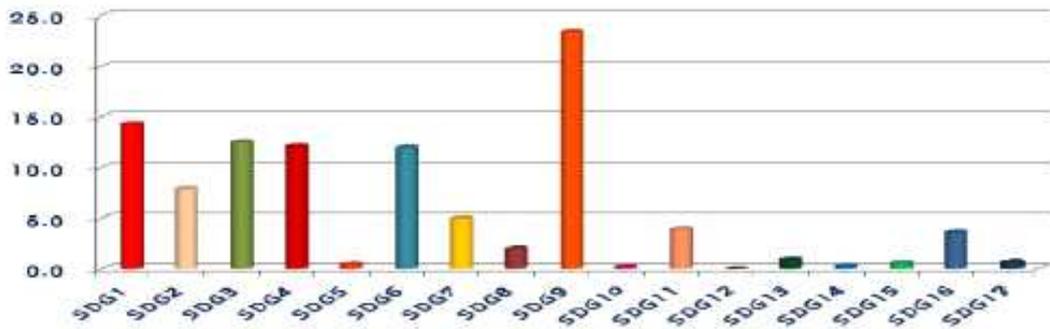
또한, 2017년도의 국제개발협력 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ODA 총 규모는 약 2조 6,359억원으로 총 42개의 기관(지자체 9개 포함)에서 1,243개사업을 추진한다. 총 ODA 중 양자협력 대 다자협력간 비율은 약 81:19, 유상협력 대 무상협력간 비율은 45:55 수준이며, 지역적으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아시아(38.1%)를 중심으로 하면서 아프리카(20.1%) 등으로 지원지역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분야별로는 교통, 공공행정, 농림수산, 보건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특히 국제사회 난민문제 해소 등을 위한 인도적 지원분야를 전년도 461억원에서 9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관련 사업규모는 약 1조 8,985억원으로 전체 ODA규모의 약 72%를 차지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인 산업화, 빈곤퇴치, 보건, 교육, 물과 위생 위주로 5개 분야에 집중지원한다. (전체 17개 목표 중 5개 분야에 74.3% 지원). 또한, 신규사업의 적극발굴로 2016년에 비해 신규사업의 규모 및 사업수는 증가하였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6).

목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사업 수(개)	176	128	119	123	14	61	22	49	140	13	33	1	35	5	12	113	52
규모(억원)	2718	1533	2372	2236	93	2277	941	374	4449	30	747	4	170	53	122	688	141
비중(%)	14.3	7.9	12.5	12.1	0.5	12.0	5.0	2.0	23.4	0.2	3.9	0.0	0.9	0.3	0.6	3.6	0.7

* SDGs 17개 목표

- ①빈곤퇴치 ②기아와 농업 ③보건 ④교육 ⑤양성평등 ⑥물과 위생 ⑦에너지
 ⑧경제성장 ⑨산업화 ⑩불평등 ⑪지속가능도시 ⑫지속가능소비생산 ⑬기후변화
 ⑭해양자원 ⑮생물다양성·생태계 ⑯평화·제도 ⑰이행수단·글로벌파트너십



<표 4-2> 2017년 ODA 지원금액 SDGs 목표별 구분

다음으로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의 양자협력의 핵심인 유상원조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무상원조의 KOICA 지원사업, 그리고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에 대해 살펴본다.

1)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개도국간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설치된 정책기금으로, 개도국의 경제 사회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며, 공적개발원조(ODA) 중 원리금을 상환받는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주로 지원하고 있다. 양허성차관은 무상협력과는 달리 상환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

도국으로서도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국가개발계획상의 우선순위와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므로 원조자금이 낭비되는 확률이 적다. 또한 우리나라로서는 원리금 회수를 통해 자금이 환류되므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편, EDCF의 참여율은 OECD DAC 최고수준으로서 개도국에 외채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5).

EDCF의 운용주체는 기획재정부로 차관사업의 결정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실제 관리에 대한 실무는 한국수출입에 위탁을 주어 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EDCF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 기획재정부, 외교부, 수출입은행의 주요업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5> EDCF 운용 기관들의 역할



※ 출처 : EDCF 안내책자, 수출입은행

이러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은 1987년 설립 이래 2016년말까지 총 53개 국가의 374개 사업에 대해 총 14조 6,843억원을 지원(승인)하였으며, 총 집행누계는 6조 5,467억원이다. 2009년 처음으로 연간승인액 1조원을 돌파한 이래 2016년에도 1조 6,308억원 상당의 사업을 신규로 승인하는 등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ODA 지원규모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다음표는 EDCF의 연도별 지원액(승인액과 지출액)과 지역별 지원액을 정리한 것이다.

연도	승인건수/승인액		자금지출 (억원)
	건수	승인액 (억원)	
1987 ~ 2005	130	22,468	14,818
2006	15	3,636	1,361
2007	19	6,402	1,553
2008	25	9,676	2,371
2009	29	11,555	3,128
2010	23	12,225	4,107
2011	24	10,181	5,097
2012	17	12,388	5,779
2013	21	13,538	6,148
2014	28	14,518	6,308
2015	19	13,948	7,343
2016	24	16,308	7,454
합계	374	146,843	65,467

<표 4-3> EDCF 연도별 지원실적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중동	대양주
승인	지원국수	16	20	7	7	2	1
	지원건수	259	64	28	12	11	1
	승인액 (억원)	102,349	32,567	9,617	3,996	3,337	91
지출액(억원)		41,644	13,267	4,071	3,958	2,447	82

<표 4-4> EDCF 지역별 지원실적

※ 출처 : 수출입은행

2) KOICA

“한국의 무상원조 전담기관으로 1991년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은 한국의 무상원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²¹⁾. KOICA는 원조를 받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효과적으로 해당국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6개 분야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 긴급구호)를 선정하여 대외 무상원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업의 형태는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연수생초청, 전문인력파견, 해외봉사단파견, 민관협력, 인도적지원, 국제기구협력 등이 있다. KOICA의 연도별 지원실적을 분야별, 사업유형별, 지역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KOICA 홈페이지)²²⁾.

		2014년(백만원)		2015년(백만원)	
		금액(백만원)	비율(%)	금액(백만원)	비율(%)
총계		580,550	100	637,210	100
분야별	보건의료	97,082	16.7	105,000	16.5
	교육	138,007	23.8	133,134	20.9
	공공행정	95,499	16.4	105,190	16.5
	농림수산	85,284	14.7	93,774	14.7
	기술환경에너지	82,622	14.2	114,268	17.9
	긴급구호	13,879	2.4	15,866	2.5

21) 한국의 무상협력 사업은 2017년 예산 기준으로 하면, 76개국을 대상으로 42개 기관(지자체 9개 포함)의 1,050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1조 1,755억원이다. 이 중 KOICA의 지원 규모는 6304억원으로 전체 지원액 대비 53.6%이다.

22) http://www.koica.go.kr/koica_introduce/odareport/oda1/index.html

	기타	68,179	11.7	69,978	11.0
사업 유형별	프로젝트	227,465	39.2	225,773	35.4
	개발컨설팅	42,710	7.4	53,784	8.4
	연수생초청	55,214	9.5	59,114	9.3
	전문인력파견	-	0.0	-	0.0
	봉사단파견	109,658	18.9	115,533	18.1
	민관협력	34,595	6.0	51,818	8.1
	소규모무상원조	5,574	1.0	6,061	1.0
	인도적지원	-	0.0	-	0.0
	행정성경비	49,830	8.6	48,127	7.6
	개발인식증진	17,677	3.0	20,735	3.3
	국제기구협력사업	37,827	6.5	56,265	8.8
지역별	아시아	236,094	40.7	252,763	39.7
	아프리카	125,780	21.7	138,339	21.7
	중남미	63,388	10.9	68,670	10.8
	중동	16,115	2.8	24,004	3.8
	동구 및 CIS	33,839	5.8	29,502	4.6
	국제기구	37,827	6.5	50,770	8.0
	미분류	67,507	11.6	73,163	11.5

<표 4-5> KOIC 연도별 지원실적

3)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한국의 EDCF와 KOICA와 같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사업 간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였고,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환경이나 정책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더구나 공적개발원조(ODA)에 국한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경제협력관계가 필요한 국가, 즉 전략적 경험대상국(이하 협력대상국)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상호 간의 국익을 도모하고 공동번영과 상생을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의 여건과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국내 기관들의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며, 협력국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공동번영을 도모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개발협력사업이 모색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KDI(한국개발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에서는 2004년부터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의 후원으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추진해 왔다. 특히 KSP가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이라는 고유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협력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한국개발원, 2014).

KSP 사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 i) 국가정책자문사업 : 한국과 협력대상국 간 정책연구·자문·연수 프로그램
- ii) 국제기구와 공동컨설팅사업 :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협력대상국에 개발컨설팅 제공
- iii)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 : 한국의 발전경험을 사례연구로 정리하여 보고서로 제작

“KSP 추진실적 관련하여, KSP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총 39개국 460여 개 세부 주제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다. 2010년부터는 KSP의 정책자문사업 협력대상국 수가 15개국에서 26개국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36개국을 대상으로 140여 개 주제에 대한 정책자문사업 및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였다”(한국개발원, 2014).

이러한 KSP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주관하에 국가정책자문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은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참여하여 각각 추진한다.

나. 국제개발에서 민관협력

“개발협력 분야의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은 기업 또는 시민사회 등 민간 부문이 ODA 사업에 개발 주체로 참여하여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사회의 민관협력에 대한 논의는 개발협력 분야에 공적 자금을 보완하면서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되어 왔다. 특히 최근 오랫동안 지속된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공여국들의 ODA 자원 축소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공공 자원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원과 참여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국제개발협력분야에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이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올랐다. 실제로 1990년에서 2010년 사이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된 민간자원 규모는 약 3.5배 증가했으며, 개발도상국에 유입된 전체 개발자원 중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60% 수준에서 2010년 30% 수준으로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를 비롯한 민간재원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민간재원의 유입 확대는 특히 최근 국제사회의 금융위기 심화와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개발재원의 새로운 제공 주체로서 민간부문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강화시키는 배경이 되었다”(대한민국 ODA 백서, 2014).

“현재 개발협력에 있어 민관협력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PPP의 본래적인 의미는 공공부문에서 제공해야 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이는 개도국의 경제상황과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PPP를 인프라 사업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공적자금과 민간재원이 함께 투입되는 개발협력 사업을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민관협력(PPP)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나, 개도국에서 수행되는 PPP사업의 대부분은 인프라 자산(asset)

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개발협력에 있어서 PPP는 재원조달 측면에서 수익성이 낮은 개도국의 인프라 사업에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경우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EDCF Issue Paper, 2012).

한국은 2010년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 국제개발 협력 기반 확대를 위하여 NGO,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상생관계 구축을 제시하였고, 국제개발협력선진화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2012년 발표한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에서도 민관협력 확대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형 ODA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선택과 집중’, ‘현장과 성과’, ‘참여와 협력’, ‘ODA 인프라 지속 확충’의 4가지 추진 방식을 제시하였고, 이 중 ‘참여와 협력’ 부문에서 정부와 민간 부문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로, i) 정부와 NGO간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ii) 기업의 글로벌 투자 및 사회공헌(CSR)과 연계한 PPP 사업을 활성화하고, 업종별 협회 등 협의채널 구축을 통한 사업을 발굴하고, iii) ODA 전공·강좌 개설 지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Think-Tank 육성 및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또한, 2015년 발표한 5개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6~2020)에서도 ‘함께하는 ODA’ 부문의 과제로 i) 민간 파트너십 다원화 및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위하여 시민단체·학계·기업으로 대상으로 민관협력 프로그램의 규모를 확대하고, 재계 CSR CSV 사업과 ODA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ii) 다양한 민간재원 활용 확대를 위하여, 국내재정의 한계 및 개도국의 개발수요 확대 등을 고려하여 개발금융 등을 통해 개발협력 재원 규모를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

이러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추진방안을 보면, 실제 개발협력에 있어 민관협력사업의 대부분이 개도국의 인프라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측면에서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무상협력 사업에 NGO의 참여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KOICA의 민관협력

“KOICA가 추진하는 민관협력사업은 1995년부터 시작되었고,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CPP), 기업협력프로그램(BPP), 성과관리협력프로그램 등이 있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CPP)과 기업협력프로그램(BPP)은 다음과 같이 추진된다”(KOICA홈페이지).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CPP)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CSO)의 전문성과 경험, 개발도상국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등을 활용하여 국제개발협력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도국 지역사회의 기초보건, 의료, 초등교육, 식수공급, 주택개량, 지역개발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인간기본생활욕구(BHN: Basic Human Needs) 충족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방식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단위 사업에 대하여 매칭펀드 방식으로 총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금 형태로 지원한다”(KOICA홈페이지).

“기업협력프로그램(BPP)은 개도국 개발목표와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을 연계하여 개도국 내 비즈니스 가치사슬(생산-가공-유통-판매 등)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개도국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개도국 시장기제(Market Mechanism)를 활용한 민관협력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제안하고, 선정될 경우 KOICA와 민간파트너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형성한다”(KOICA홈페이지).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1년간 KOICA가 민간협력사업의 총 규모는 1,389개, 약 390,962백만원이며, KOICA의 분담금은 190,829백만원(49%)이며, 민간파트너가 자부담한 금액은 200,133백만원(51%)이다. 이러한 민간협력사업의 규모는 1995년 37개, 총사업비 약 21억원에서 2015년 165개, 총사업비 약 538억원으로 21년간 약 24.6배 확대되었고, 이 총사업비 중 KOICA분담금은 1995년 480백만원에서 2015년 37,147백만원으로 약 77배 증가하였다”(KOICA홈페이지).

“민간파트너의 규모를 보면, 21년간 총 955개 단체가 참여하였는데, 이 중 한국NGO 769개(81%), 기업 80개(8%), 대학 81개(8%), 개도국NGO 25개(3%)로 한국NGO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사업대상지역을 보면, 21년간 총 사업개수 1,389개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아시아 882개(63%), 아프리카 369개(27%), 중동CIS 92개(7%), 중남미 46개(3%) 순이고, 21년간 KOICA 분담금 총규모인 190,829백만원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아시아 104,934백만원(55%), 아프리카 64,985백만원(34%), 중동CIS 13,874백만원(7%), 중남미 7,036백만원(4%) 순으로 나타나, 사업의 개수와 지원금 모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90%가량이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KOICA홈페이지).

2) EDCF의 민간협력

유상원조 분야의 민간협력 사업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정부는 ODA분야의 PPP 확대 추세에 발맞추어 다양한 모델을 적용하여 새로운 민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중이다.

이러한 민간협력사업은 크게 민자사업차관, 복합금융, 보증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민자사업차관(Public-Private Partnership Loan)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민간협력 파트너십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개도국의 정부나 민자사업법인

(Project Company) 앞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한 제도이다. 복합금융은 개도국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에 EDCF 차관대출이나 개도국 정부의 출자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사업성을 보완하고 국가리스크를 줄일다는 면에서 민자사업차관과 그 성격이 비슷하고, 차관대출 부분은 유상 ODA로 계상한다. 보증제도는 해당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 앞으로 위험을 경감시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으로, 전통적인 ODA 방법은 아니지만, OECD DAC에서는 이러한 보증 제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공여국의 보증지원을 ODA로 계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개발협력 정책

인도네시아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지정한 24개의 중점협력국 중 하나이다. 한국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개발협력 정책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2016년 5월에 발표한 인도네시아 국가협력전략(Indonesia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바탕으로 한다.

인도네시아 제1차 국가협력전략(2012-2015)은 인도네시아 국가중기개발계획인 RPJMN의 성공적인 수행에 협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여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경제를 발전시킴과 함께 빈곤을 감소하는 데에 공헌하고 두 국가간 우호와 교류협력의 증진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에서 필요로 하는 개발수요와 우리나라의 강점 등을 고려하여 3개의 중점협력분야를 선정하였는데, (i) 공공행정 역량강화, (ii) 경제인프라 확충, (iii) 환경·자연관리 강화가 그것이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 28개의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총 1억 7,318만 달러 규모의 대인도네시아 원조사업을 추진하였고, 무상협력과 유상협력의 비율은 62:38로 나타나, 전체 평균치인 45:55 에 비해 무상협력이 더 높은 수준이다.

(백만 달러, 총지출, 명목가격)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유상	집행	9.12	13.79	21.30	14.89	6.14	65.24
	약정	140.00	-	-	85.00	-	225.00
무상	집행	19.04	17.89	23.20	24.28	23.53	107.94
	약정	18.44	23.00	25.39	29.15	28.46	124.44
계(집행)		28.16	31.68	44.50	39.17	29.67	173.18

<표 4-6>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5년간 지원실적(2010~2014)

분야별로는 2010-14년간 보건 분야(60.8%)가 가장 많았고, 이어 환경보호, 교육, 통신, 운송 및 저장 분야가 상위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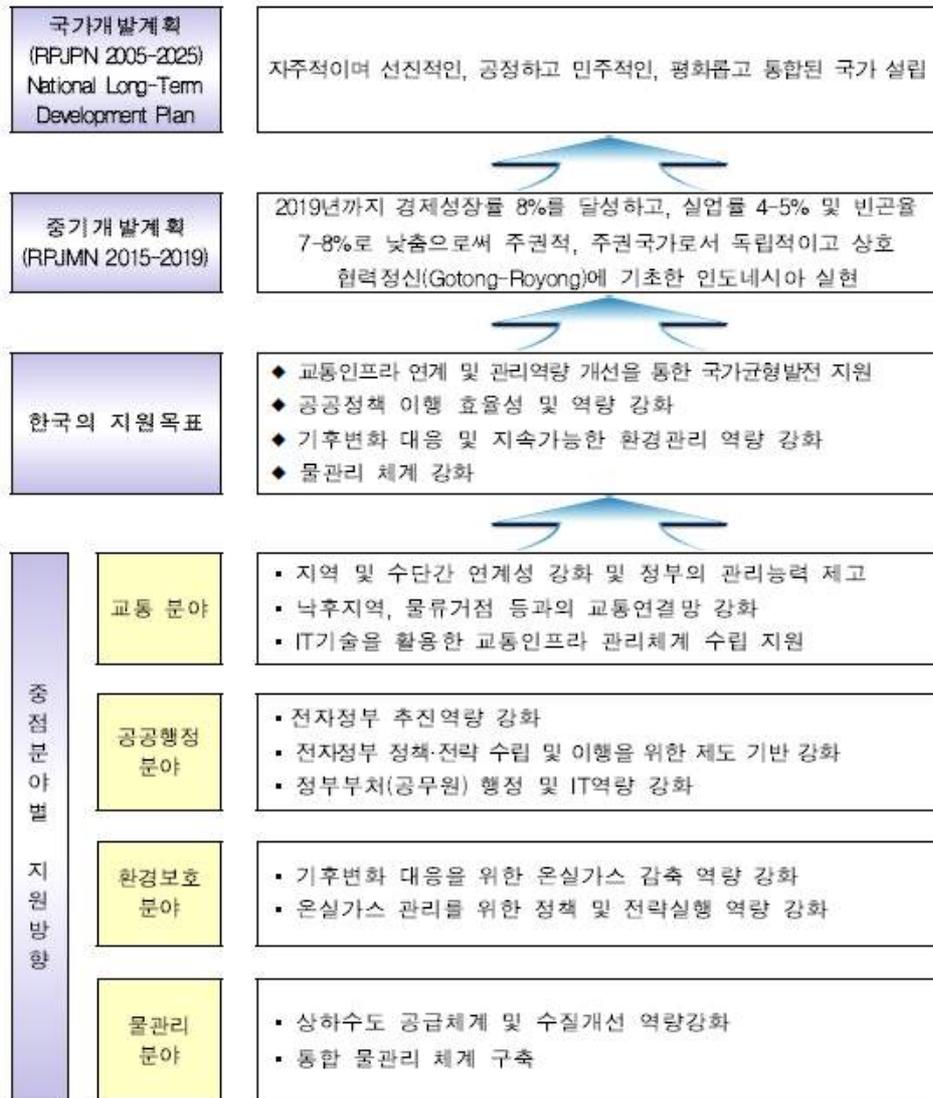
(백만 달러, 총지출, 집행액, 명목가격)

구분	보건	기타	환경 보호	교육	운송/ 저장	통신	농림 수산업	에너지	식수공급 및 위생
금액	50.88	27.66	17.01	16.05	15.63	14.69	10.62	9.612	9.32
비율(%)	29	16	10	9	9	8	6	6	5

<표 4-7>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5년간 분야별 지원실적(2010~2014)

2016년 5월 발표한 인도네시아 국가협력전략(2016 ~ 2020)에서는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개발협력 지원사업 목표를 인도네시아의 국가 중기개발계획(RPJMN)의 주요과제인 ① 인적개발(교육, 보건, 주택 공급, 인격), ② 주요 섹터 개발(식량·에너지·전기·해양·관광·산업 주권), ③ 소득계층 및 지역 간 평등권, ④ 법의 집행, 안보, 정치, 민주주의, 공공 및 관료주의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명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통, 공공행정, 환경보호, 물관리 이렇게 4개분야를 중점협력 분야를 지정하고 전체 지원금액의 70%를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림 4-6> 대인도네시아 국가협력전략 기본방향



1) 대인도네시아 유상지원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지원 중 유상지원인 EDCF 지원의 경우, EDCF가 설립된 1987년부터 2016년까지 지원한 총금액 15조 1,956억원 중 전체의 4.3%인 6,491억원을 지원하여 7위에 해당한다.

순위	국가명	지원금액 (백만원, 승인액)	비율	건수
1	베트남	2,913,414	19.2%	64
2	방글라데시	1,316,621	8.7%	23
3	필리핀	889,760	5.9%	18
4	캄보디아	882,677	5.8%	21
5	미얀마	681,542	4.5%	12
6	스리랑카	662,012	4.4%	27
7	인도네시아	650,124	4.3%	20

<표 4-8> EDCF 지원금액 순위별 지원현황

이러한 EDCF 지원사업 중 인도네시아에 대한 20개 지원사업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사업명	승인연도	승인액(백만원)	집행액(백만원)
1	파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1987	9,839	9,774
2	이동식 직업훈련사업	1991	18,181	16,994
3	생견사제조 해투사업	1992	978	978
4	실업교육 개선사업	1994	8,111	7,098
5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	1995	13,318	13,203

6	칼리만탄병원 개선사업	1997	27,534	27,367
7	병원폐수 처리시설 확충사업	1999	45,336	44,913
8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	2000	34,369	32,902
9	국가범죄정보센터 개발사업	2004	19,438	19,312
10	종합병원 개선사업	2005	27,500	23,717
11	바탐 전자정부 구축사업	2006	14,747	14,124
12	국가정보통신교육원 건립사업	2006	19,362	19,103
13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 2차 사업	2006	19,094	5,212
14	아담말릭병원 개선사업	2008	34,164	32,355
15	파당시 우회도로 확장사업	2009	62,746	31,246
16	경찰청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2010	48,842	499
17	카리안담 건설사업	2010	109,520	29,065
18	바탐 하수처리시설 구축사업	2013	57,397	2,768
19	경찰청 고속순시선 공급사업	2013	40,930	8,691
20	인도네시아 수자원 엔지니어링 사업	2016	38,718	-
	소계		650,124	339,321

<표 4-9> EDCF 인도네시아 지원사업

출처 : 경협 연보통계(2017.2)

이러한 EDCF 지원사업 중 종합병원 개선사업과 국가정보통신 교육원 건립사업의 성과와 관련하여 현지 인터뷰와 함께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i) “자카르타에서 차로 1시간 남짓 달리면 마르조에끼 병원이 나온다. 마르조에끼 병원은 종합병원으로 EDCF의 작품이다. 지난 2007년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EDCF 자금을 얻어 CT스캐너, 베이비 인큐베이터, 치과치료기기, 수술장비 등 고가의 진단 및 시술장비를 확보했다. 예리 마르조에끼 병원장은 첨단장비를 확보한 후부터는 신속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해졌다며 기뻐했다”(뉴시스, 2015/3/23)

ii) “2680만달러의 EDCF자금이 투입된 국가정보통신교육원 건립 사업은 인도네시아의 ICT 전문인력을 키워 내기 위한 것이다. 정보통신교육원은 지난 2010년 개원한 후 매년 3000명 이상의 교육생을 배출한다. 이곳에서는 국가공무원의 정보통신교육과 직업교육을 담당한다. 직업교육을 수료하면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가 발급하는 전문자격증을 받을 수 있고 교육생의 30%를 여성에 배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진출도 돕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 노하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현지 방송국에 공급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린다 마타 정보통신교육원 부소장은 R&D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정보기술(IT)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그는 향후 지방에 정보통신교육원을 세울 때 운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뉴시스, 2015/3/23)

2) 대인도네시아 무상지원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국제협력 지원액은 지난 5년간 (2010-2014년) 집행액 기준 1억 7,318만 달러에서 무상지원이 1억 794만 달러로 62.3%를 차지한다. 다음은 2017년 추진사업중 대인도네시아 무상협력 지원사업 목록이다.

	담당부처 또는 기관	지원방식	사업명	사업 기간	총예산 (억원)	'17년예 산 (억원)	
1	기획재정부	KSP 개발컨설팅	공공투자 관리 강화를 통한 인프라 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 개선	2017- 2018	3.8	3.8	
2	교육부	개발컨설팅	국제협력 선도대학사업 (인도네시아 세나타 다마 대학교의 화학교육과 설치 및 지역사회 공헌)	2016- 2020	16.24	4.24	
3	외교부 (KOICA포함)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칠리웅강 복원 시범사업	2013- 2017	56.5	-	
4		개발컨설팅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권해안종합개발 컨설팅사업	2014- 2017	106.4	31.24	
5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치타룸강 홍수예경보 시스템 개발사업	2014- 2017	56	7.50	
6		개발컨설팅	인도네시아 광해실태조사 및 시범복구사업	2014- 2017	35.84	6.50	
7		개발컨설팅	인도네시아 국가도로통합데이터센터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시스템 구축사업	2014- 2017	44.24	1.00	
8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역량강화제도 구축 컨설팅 및 시범사업	2016- 2020	28.5	-	
9		글로벌연수	인도네시아 IT를 활용한 사이버 범죄 수사 역량강화 과정	2015- 2017	3.66	1.215	
10		글로벌연수	인도네시아 공공감사 역량강화 지원	2016- 2018	3.66	1.215	
11		글로벌연수	인도네시아 국세시스템 관리	2016- 2017	3.24	1.620	
12		글로벌연수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의 섬유 제품 안전 규제 강화를 통한 산업 발전(관리자 과정)	2015- 2017	2.43	0.810	
13		프로젝트	UNESCO 인도네시아 및 나미비아 사이언스파크 및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구축 지원사업	2017- 2018	3.99	0.58	
14		행정자치부	개발컨설팅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협력센터 운영	2016- 2018	15.95	4.95
15		산업통상부	개발컨설팅	인도네시아 공작기계 테크니컬센터 설립 지원사업 타당성조사	2017	2.00	2.00

16		개발컨설팅	권역별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인도네시아)	2008 년부터 계속	33.05	1.96
17		기술협력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원 (인도네시아)	2016- 2018	5.50	1.00
18	산림청	프로젝트	한-인도네시아 산림 휴양 및 생태관광 협력사업	2015- 2018	20.80	15.20
19	국민권익위	기술협력	인도네시아 반부패역량 강화 지원	2017	0.04	0.04
20	경상북도	프로젝트	저개발국새마을시범마을조성 (인도네시아)	2015- 2017	17.10	6.30

<표 4-10> 대인도네시아 양자 무상지원사업 목록 (2017년 편성액 기준)

출처 :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중 재구성

이러한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의 무상지원 중 KSP 지원의 경우, 경제개발과 금융, 에너지, 보건 분야 등에 걸쳐 2014년까지 46개 과제에 달한다.

특히 2010~2012년에는 인도네시아를 중점지원국으로 지정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 중 대표적인 사업이 '상수도시스템 및 홍수에·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컨설팅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강의 기적'을 모델로 '찌따룽강의 기적'을 만들기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작품이다.

수질개선은 물론 댐 건설까지 찌따룽강 개발의 전 과정을 KSP를 통해 마련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시드머니로 ECDF에서 1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카리안 댐이 들어서면 자카르타 및 인근 지역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홍수피해도 막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은 KSP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헤루푸도 누그르호 인도네시아 재무부 사업부 과장은 KSP는 수요국가 위주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맞춤형 컨설팅과 마찬가지로 평가했다. 압둘 말리 인도네시아 재무부 수자원담당과장은 KSP를 통해 한강개발과의 차이점을 비교한 후 짜따룽강 개발사업에 활용했다면서 앞으로 수자원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과제 등에 대해 한국과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뉴시스, 2015/3/23).

이 카리안담 건설사업에는 농어촌공사와 대림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진행한 국고딜링룸도 KSP의 성과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고딜링룸을 통해 중앙은행이 아닌 상업은행에 여유자금을 예치함으로써 국고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국고딜링룸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KSP의 자문을 활용함으로써 유희 국고자금의 효율적 운용 등에 큰 도움을 얻었다. 아울러 국고딜링룸 운영의 법제화를 권유함으로써 공적기금 운용을 위한 기본틀을 제공했다”.(뉴시스, 2015/3/23).

5. 정책 제언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유일의 G20 국가이자, 아세안(ASEAN) 국가 중 최대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로 2.5억명에 달하는 인구대국으로 최근 5%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17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는 구매력평가 기준 GDP의 관점에서 인도네시아가 향후 세계 10대 국가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경제발전의 잠재력이 매우 많은 인도네시아는 중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장·중·단기의 단계별 경제개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도로, 교통, 전기 등의 개발인프라는 아직도 많이 열악한 상황으로, 인도네시아의 경제개발정책 또한 이러한 열악한 인프라를 개발하는 데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유상과 무상의 개발협력 정책을 위한 중점협력국 중 하나로 인도네시아를 선정하고 집중적인 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국가간의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가. 유상협력분야의 민관협력사업 발굴

2016년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유상원조 분야에서도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한국의 개발협력정책 중에서 민관협력은 KOICA의 무상협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유상협력인 EDCF에서 PPP 사업에 대한 지원은 2015년 민자사업 차관으로 승인된 라오스 세피안 수력발전사업과 2016년 캄보디아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사업 이렇게 2건에 불과하다.

인도네시아의 중기경제개발계획인 RPJMN 2015~2019을 보면, 프로그램 총 29개, 세부 프로젝트 총 116개 중에서 인프라와 관계있는 프로그램은 16개로 전체예산의 88%나 차지한다. 전체 중기경제개발계획 (RPJMN 2015-2019)에 필요한 자금 약 4,610억 달러인데, 정부예산은 약 22%, 국영기업 6%, PPP 20%, 그리고 나머지 자금 약 50%는 해외 차관으로 충당할 계획인데, PPP 사업과 외부 차관을 통한 투자금 확보가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2014).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인프라개발을 위한 PPP 사업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므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국가간 경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가 실제로 필요한 인프라개발에 대한 PPP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더 발굴할 필요가 있다.

1) 민간기업의 PPP 사업 참여 실질적 지원

민간기업이 해외국가가 시행하는 인프라사업 중 PPP 사업을 직접 찾고 참여하기에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르는 위험부담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해외에서 추진하는 PPP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부담해야 하는 위험부담을 감소시켜 주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KOICA의 무상원조와 EDCF와 같은 유상원조를 결합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PPP 사업을 발굴하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등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미리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조사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KOICA의 무상지원을 이용하여 이러한 비용을 지원하는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높다고 결론날 경우 EDCF를 통하여 유상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는 KOICA의 무상

원조와 EDCF의 유상원조를 체계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러한 유·무상원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유·무상원조를 각기 다른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두 개의 기관을 일원화하여 유·무상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PPP 발굴 지원만이라도 유상과 무상원조를 단일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인도네시아 PPP 사업 관련 법·제도 개선 지원

인도네시아 정부는 PPP 사업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 PPP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인도네시아 현지의 법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ODA 정책 중 하나인 KSP(지식공유프로그램)와 KOICA가 시행하고 있는 국별협력사업 중 개발컨설팅사업(DEEP,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KSP는 총 3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가정책자문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은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국가정책자문사업은 상대국의 수요조사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기반으로 한 경제·사회·발전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을 제안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2016/2017년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한 제조업 부문 강화를 위한 재정정책 역할 강화, 인도네시아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혁, 중소기업 신용프로그램(KUR) 운용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사업을 추진중이다”(한국개발원, 2014).

이러한 KSP의 정책자문사업을 이용하여 인도네시아의 PPP 제도 개선방향을 과제로 선정한다면 인도네시아의 PPP 관련 법과 제도 구축에도 실질적 도움을 주는 한편, 인도네시아가 실제 이를 적용할 경우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PPP 사업 진출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개발컨설팅사업(DEEP)은 KOICA의 국별협력사업 중 하나로, 국별협력사업은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발전 및 복지향상 등 특정 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물적·인적 협력수단을 다년간(2년~5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중에서도 컨설팅, 전문가 파견 및 초청 연수 등의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을 주된 수단으로, 우리나라의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통해 협력국의 역량을 개발하는 기술자문 사업을 개발컨설팅 사업으로 별도 분류하고 있다”(KOICA 홈페이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KOICA는 한국의 해당 분야 전문가 인도네시아 파견 및 PPP 사업 관련 법·제도 정비와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대인도네시아 ODA 규모 확대

“한국의 전체 ODA 지원액 중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액은 EDCF를 기준으로 할 경우, EDCF가 설립된 1987년부터 2016년까지의 총 지원금액 15조 1,956억원 중 전체의 4.3%인 6,491억원을 지원하여 전체 지원대상국 중 7위에 해당한다”(한국개발원, 2014).

이는 국가별 지원액 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베트남의 19.2%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고,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필리핀, 캄보디아, 그리고 미얀마와 같은 인도네시아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대한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비교하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유상지원을 시작한 1987년부터 현재까지 EDCF의 인도네시아 지원사업을 보면, 총 20개 중 2010년까지 총 17건(승인년도 기준)의 사업이 집중되어 있고, 이후에는 총 3건(2013년 2건, 2016년 1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프라개발에 집중한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국가간의 경제협력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유상원조의 규모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인도네시아에 대한 EDCF 지원규모 확대는 다른 국가에 대한 지원을 감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기존 지원액이 많았던 국가들과의 지원현황 및 지원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지원금액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EDCF 지원사업 추진 이래 근 30년간 총 지원금액의

20% 정도가 베트남에 투자되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환경을 비교하면, 인도네시아는 베트남에 비해 GDP는 더 높지만, 국가면적은 6배 더 넓고, 인구수는 2.5배에 달하는 등 인프라 개발 필요성과 그 수요는 베트남에 뒤지지 않는다. 따라서, 베트남의 지원규모를 일부 감축하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국가별 유상지원 현황을 재검토하여 새롭게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금액 확대가 필요하다.

다. 이슬람문화에 대한 이해 및 활용

정부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원조사업이든 민간기업의 현지진출이든 간에 대상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는 전제조건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전체인구의 80%를 넘는 상황으로, 전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한국인에게는 낯설기만 한 이슬람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슬람교는 하루 5번 기도, 돼지고기와 음주 금지 등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정들이 많은데, 이러한 이슬람 특유의 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1) 이슬람문화에 이해도 높이기

우리나라가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통하여 중점 지원하는 아시아의 다른 국가인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는 국민 대부분이 불교신자이다. 이러한 불교문화는 한국인에게도 익숙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문화는 한국인에게는 낯설기도 하고, 최근 전세계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ISIS의 테러로 인해 인식도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런 반면, 인도네시아는 한류열풍으로 한국과 한국인을 매우 좋아하고 있어, 두 국가간 상대국에 대한 인지도 또는 호감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따라서, 이러한 두 국가간 경제협력을 하려면 인도네시아만의 독특한 문화, 그 중에서도 이슬람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게다가, 이슬람교는 다른 어느 종교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범과 금기사항이 많고,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인에게 종교의 영향력은 매우 막강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와 경제협력을 추진하려면 그 주체가 공공기관이든 민간사업자이든 관계없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인도네시아 문화, 특히 이슬람 문화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KOICA의 무상원조사업을 활용하여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상품시장 진출을 위한 할랄에 대한 이해

앞 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인도네시아 인프라개발에 대한 PPP 사업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민간기업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할랄이다.

“이슬람교도들은 이슬람 경전인 쿠란에서 허용하지 않는 음식, 즉 하람(Haram)이 아닌 모든 식품을 먹을 수 있다. 이슬람 신자들이 먹는 음식이 할랄푸드이다. 일부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금하지만 깨끗하고 건강에 좋은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은 허용하며 아랍어로 할랄은 ‘허용할 수 있는’이라는 의미이다. 이와 반대로 허용되지 않음을 ‘하람(haram)’이라고 한다. 할랄은 허용되는 음식을 가리키지만, 이슬람교에서는 보다 넓은 의미로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준다. 할랄과 하람은 세상의 문제, 종교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 할랄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돈육이나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은 식품과 음료를 의미한다. 육류는 할랄 인증을 받은 도축장에서 ‘알라의 이름으로’라는 주문을 외운 뒤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 동물의 앞쪽에서 도살하는 이슬람 방식에 의해 도축된 것만 수출할 수 있다”(LPPOM MUI 홈페이지).

“이에 따라, 2014년 9월 25일, 인도네시아 의회는 ‘2019년부터 비할랄(non-halal)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해 『Non-Halal』 라벨 부착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할랄 인증이 권고였으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2019년부터는 할랄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으로, ‘할랄 인증 강화 법안(Halal Product Guarantee Act)’의 발효시 할랄 인증 비용보다는 법을 어김에 따른 처벌이 더욱 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강화 법안은 ‘할랄

규정을 어길 시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LPPOM MUI 홈페이지).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기관인 이슬람율법학자평의회(MUI, Majelis Ulama Indonesia)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증을 위하여 대행기관으로 ‘이니할랄코리아’ (LPPOM MUI, Lembaga Penkajian Pangan Obat-obatan dan Kosmetika MUI)를 지정하고,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기관에서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무슬림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상품의 할랄인증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할랄 규정을 점점 강화하는 추세로,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기업들은 반드시 할랄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내 유일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인 ‘이니할랄코리아’와 업무적으로 협력하여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할랄교육을 실시하여, 한국기업들이 수출 전 할랄문제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제품의 할랄인증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예를 들어, 인증절차 지연과 인증비용 등에 대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할랄인증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불닭볶음면 관련 사건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017년 6월 삼양면(Mi Samyang)으로 불리면서 큰 인기를 끌었던 불닭볶음면이 할랄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에서 큰 뉴스거리가 되었다. 불닭볶음면은 2016년 이후부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의 많은 국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2017년 6월 삼양 불닭볶음면 외에도 총 네 종류의 한국산 라면안에 돼지고기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라면들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퇴출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 제품들을 수입한 인도네시아 회사에서는 할랄인증절차를 진행중이며, 2017년

7월말 결과가 나올 것이며, 이 라면들에 돼지고기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Kompas, 2017/7/10). 하지만 이미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에게 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인식되면서 향후에도 판매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대창, 김유미. (2013).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강명구. (2017). 인도네시아 PPP사업의 전망과 시사점. KDB.

김재원. (2007). 현대의 민족문제와 다문화주의; 인도네시아: 판차실라의 나라 - 인도네시아. 민족연구 30:65~89.

박경환, 윤희주. (2015). 개발지리학과 국제개발협력(IDC)의 부상, 한국 도시지리학회지.

박지영. (2015). 다종교 상황에서 공존을 위한 종교교육 연구 : 이슬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분석을 통하여.

조은경. (2015 가을). 인프라 투자를 위한 인도네시아 중기개발계획 (2015-2019)의 시사점.

조원빈, 정구연. (2015). 한국 공적개발원조 배분의 이론과 실제 - 아프리카 지역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ODA 백서. (201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2015). 국제개발협력위원회.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16).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2010).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201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인도네시아 인프라 개발 현황과 전망. (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동남아 인프라 개발 현황과 시사점 :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그리고 아세안. (2015).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SNUAC) 동남아센터 신흥지역연구단.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 인도네시아. (2014). 한국개발원(KDI).

2017년 신흥국 경제 전망. (2017).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EDCF Issue Paper Vo1, No1 : 개도국 민관 협력(PPP) 사업의 이해. (2012). 한국수출입은행.

EDCF 안내 책자. (2015).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행정연구원. (2013). 인도네시아의 행정과 공공정책. 대영문화사.

Global Market Report : RCEP 13차 협상관련 참여국 동향. (2016). KOTRA.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 2015-2019). (2014).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

PPP Book 2017 (Public Private Partnerships : Infrastructure Projects Plan in Indonesia). (2017).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BAPPENAS)

< 홈페이지 >

한국무역협회. (2017년 6월 1일). Retrieved from <http://www.kita.net/>

한국관광공사. (2017년 6월 3일). Retrieved from

<http://www.visitkorea.or.kr>

KOTRA, (2017년 6월 3일). Retrieved from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47004>

LPPOM MUI, (2017년 6월 10일). Retrieved from
<http://www.inihalalkorea.com>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2017년 6월 8일). Retrieved from
<https://www.bps.go.id/>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2017년 6월 15일). Retrieved from
<https://www.ekon.go.id/ekliping/cat/paket1/>

Hukum Online.Com. (2017년 6월 15일). Retrieved from
<http://www.hukumonline.com/berita/baca/lt585a6838b3278/ini-paket-kebijakan-ekonomi-pemerintah-sepanjang-2016>

Indonesia Investment. (2017년 6월 8일). Retrieved from
<https://www.indonesia-investments.com/id/proyek/rencana-pembangunan-pemerintah/item305?#>

< 신문 >

뉴시스, “한국, 인도네시아에 경제 지원 및 성장 노하우 전수”. 뉴시스 홈페이지. 2015년 3월 23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22_0013551386&cID=10102&pID=10100. 2017년 7월 2일 접속.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교민 "동남아 최대시장 관심 가져야". 연합뉴스 홈페이지. 2017년 5월 10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09/0200000000AKR20170509107800104.HTML?input=1195m>. 2017년 6월 8일 접속.

Kompas. "Nasib Mi Samyang Halal Kini di Pasaran...". Kompas.com, 10 Jul 2017.
<http://megapolitan.kompas.com/read/2017/07/10/09480901/nasib.mi.samyang.halal.kini.di.pasaran>. accessed 15 Jul 2017.